

제 12회 수원학 심포지엄

# 해방 80년, 원폭피해를 말하다

기억으로 잇는  
평화와 정의의 연대



2025. 8. 6. (수) 15:00~17:00

수원시청 중회의실

주최·주관 | 수원시정연구원 수원학연구센터, 경기도원폭피해자협의회, 수원KYC

# 해방 80년,

제 12회 수원학 심포지엄

2025. 8. 6.(수) 15:00~17:00

# 원폭피해를

# 말하다

수원시청 중회의실

# 기억으로 잇는

# 평화와 정의의 연대

온라인 자료집 다운로드



## CONTENT

---

<b>진행순서</b>	06
<b>주제발표</b>	07
세계유산 현장에서 사라진 강제동원 역사와 원폭피해 김승은 (식민지역사박물관 학예실장)	08
구술로 보는 수원 및 경기지역 원폭피해자의 삶과 고통 소현숙 (역사문제연구소 연구위원)	24
광복 80년 원폭 80년, 비핵평화를 위한 국가와 시민의 과제 - 경기도 원폭피해자와 함께하는 비핵평화운동 이대수 (아시아평화시민네트워크 대표)	36
<b>종합토론</b>	49
박철하 (전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전문위원)	50
한혜인 (아시아평화와역사연구소 연구위원)	58
방학진 (민족문제연구소 기획실장)	64

## 진행순서

시간	구분	내용
15:00~15:30	개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 김찬수(민족문제연구소 수원지부장)</li> <li>• 국민의례 및 묵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회사 김성진(수원시정연구원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축사</li> </ul>
15:30~16:15	주제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념촬영 및 자리정돈</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계유산 현장에서 사라진 강제동원 역사와 원폭피해 김승은(식민지역사박물관 학예실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술로 보는 수원 및 경기지역 원폭피해자의 삶과 고통 소현숙(역사문제연구소 연구위원)</li> <li>• 광복 80년 원폭 80년, 비핵평화를 위한 국가와 시민의 과제 - 경기도 원폭피해자와 함께하는 비핵평화운동 이대수(아시아평화시민네트워크 대표)</li> </ul>
16:15~16: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휴식 및 장내정리</li> </ul>
16:25~17:00	종합토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좌장 김민철(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li> <li>• 토론자 박철하(전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전문위원) 한혜인(아시아평화와역사연구소 연구위원) 방학진(민족문제연구소 기획실장)</li> </ul>
17:00~17: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폐회</li> </ul>

제 12회 수원학 심포지엄

# 주제발표



주제발표

# 세계유산 현장에서 사라진 강제동원 역사와 원폭피해

김승은 식민지역사박물관 학예실장

해방80년, 원폭피해를 말하다-기억으로 잇는 평화와 정의의 연대

## 세계유산에서 사라진

## 강제동원의 역사와 원폭피해

김승은  
식민지역사박물관 학예실장

### 목차

01. 세계유산, 역사부정의 현장이 되다
02. 지워진, 잊힌 강제동원의 역사
03. 원폭피해-식민지, 전쟁, 냉전의 피해자

01. 세계유산, 역사부정의 현장이 되다

**"전쟁은 인간의 마음에서 생기는 것이므로 평화의 방벽을 세워야 할 곳도 인간의 마음이다."** - 유네스코 창립헌장



-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반성, 이를 되풀이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만든 국제기구
- 1972년 '세계유산협약'을 채택, 인류 공동의 유산 지정 관리
- 인류가 저지른 잘못에서 교훈을 찾기 위해 '부정적 유산'도 보존
- 대표적인 유산이 폴란드의 아우슈비츠-베르케나우 나치독일 강제집단학살 수용소(1940-1945)

01. 세계유산, 역사부정의 현장이 되다

**"'forced to work'는 '강제노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기시다 외무대신 임시 회견 기록, 2015.7.5.

- 한국인 강제노동이 있었음을 인정하지 하지도 지나지 않아 이를 부인하는 기시다 외무대신의 발표
- 1965년 한일 청구권 및 경제협력 협정에 의해 이른바 '한반도 출신자의 징용 문제'를 포함, 한일간 재산·청구권 문제는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일본 측 입장 반복

2015년 등재 당시 일본 대표 발언	2017년 일본 제출 이행경과보고서
1940년대 일부 시설에서 수많은 한국인 등이 본인의 의사에 반해 동원되어 가혹한 조건하에서 강제 노역하였다.	전쟁 전, 중, 후 수많은 한반도 출신자들이 일본의 산업을 지원하였다.
정보센터 설치와 같은 희생자를 기리기 위한 객관적인 조치를 해선 전략에 포함시키겠다.	산업유산 보존을 위해 보급과 이해에 기여하는 신 플랫폼으로서 도교에 정보센터를 설치할 계획이다.

출처 : 일본 근대산업시설 세계유산 등재 후속조치 경과(외교부 보도참고자료, 2020.6.15.)

[http://contents.nahf.or.kr/item/level.do?levelId=lsjs\\_d\\_0001\\_0020](http://contents.nahf.or.kr/item/level.do?levelId=lsjs_d_0001_0020)

01. 세계유산, 역사부정의 현장이 되다

**"서구와의 기술교류를 통해 비서구 국가에서 달성한 최초의 산업화 유산"**

- 「메이지일본의 산업혁명 유산」 세계유산의 가치

- 2015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 23개 산업시설
- 1850년대부터 1910년까지 철강, 조선업, 석탄업을 중심으로 성취한 일본의 근대화 유산으로 구성
- 군함도를 포함해 야하타제철소, 미이케탄광, 나가사키조선소 등 강제동원·강제노동의 현장 포함
- 등재 당시 "1940년대에 일본 일부 시설에서 **한국인들과 다른 국민이 본인의 의사에 반해** 끌려와 가혹한 조건하에서 **강요된 노동을 했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는 조치"를 국제사회에 약속

01. 세계유산, 역사부정의 현장이 되다

**"모두 사이 좋게 지냈다" "강제노동, 차별은 없었다"** - 일본 산업유산정보센터

메시지 영상 "누가 역사를 날조하고 있는가"

- 2020년 6월 도쿄 총무성 제2청사 별관 건물 일부를 개조해 '산업유산정보센터' 개관
- "희생자를 기리기 위한 조치" 대신 하시마탄광 옛 주민들의 증언을 근거로 "가족처럼 함께 살았다"는 메시지만 공개 전시
- 산업유산국민회의는 2017년 12월부터 「**군함도의 진실, 조선인 징용공의 검증**」이라는 웹사이트 운영
- 2021년 7월 유네스코와 이코모스(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 공동조사 결과, "희생자를 기억한다는 목적에 부합하는 전시가 없다"고 결론, 일본 정부의 약속 불이행에 강한 유감 표명

## "메이지일본의 산업혁명 유산"(2015) / "사도섬의 금산"(2024)



## 전쟁이 있는 곳에 미쓰비시가 있다 - 나가사키조선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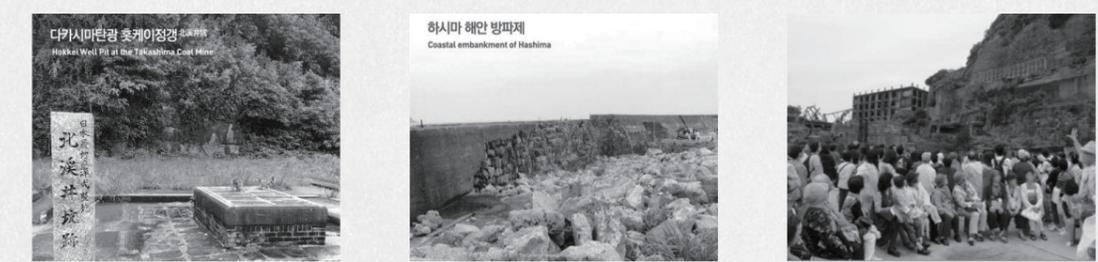
- 일본의 전쟁과 함께 성장한 대표적 재벌 기업, 1934년 일본 최대의 군수기업으로 성장
- 일본이 침략전쟁을 확대하는 동안 미쓰비시중공업 나가사키조선소는 82척의 군함과 1만여 개의 어뢰 생산
- “유일한 고속력·고고도의 투하에 대응한 강도·신뢰성이 있으며, 명중률과 파괴력 모두 세계에서 으뜸가는 성능을 지니고 있다” - 미쓰비시 나가사키조선소 사료관에 실물로 전시되고 있는 어뢰의 설명문
- 조선업의 거점이 나가사키조선소에 한국인 약 6,000여 명, 연합군포로 약 500명 동원

## 청일전쟁 배상금으로 지어진 아하타제철소



- 전쟁 배상금 2억 량, 그 가운데 80% 군사력 확충에 투입, 20% 관영 아하타제철소, 건설과 철도, 전신·전화 사업에 투자
- 침략전쟁의 장기화로 철강 수요 증대, 일본제철 아하타제철소를 중심으로 규슈유대 군수생산의 거점 형성
- 일본의 산업혁명이 주변국을 침략한 전쟁으로 성공한 근대화임을 잘 보여주는 사례
- 아하타제철소에 한국인 약 4,000명, 연합군 포로 1,353명이 동원, 기타 관련시설에도 한국인 8,000명, 중국인 1,000여명, 연합군포로 601명 동원

## 죽어야 벗어날 수 있는 지옥섬 - 다카시마.하시마탄광



- 다카시마의 홋케이정갱 터, 하시마탄광의 수직갱 터와 해안 방파제 유구 일부만 세계유산 지정
- 다카시마탄광·폭압적 노무관리, 최수노동, 노동자 탄압으로 악명 높음. 저임금 식민지 노동력으로 충당
- 일명 '군함도': 탄광시설 확충 위해 매립, 해안 방파제 공사. 1916년 이후 콘크리트 고층 아파트 건설
- 다카시마탄광에 한국인 4,000명, 중국인 409명 동원

01. 세계유산, 역사부정의 현장이 되다

최수노동에서 조선인 강제노동으로 성장한 미쓰이 미이케탄광



- 일본 최대의 탄광, 1883년 전용 감옥, 죄수노동으로 채굴, 1889년 미쓰이 운영, 1931년까지 죄수노동
- 1939-1945년 일본 본토에 끌려간 한국인의 약 40%가 탄광에 배치
- 죄수노동에 이어 강제동원된 한국인 노동자들, 죄수 노예와 다름없는 취급
- 미이케탄광에 한국인 9,000명 이상, 중국인 2,481명, 연합군포로 1,875명 동원

02. 지원진, 잊힌 강제동원의 역사

강제동원의 시행과 과정



- 1931년 만주침략, 1937년 중일전쟁, 식민지 조선을 물적, 인적으로 총동원하는 체제 정비, 강화
- 노무자 약 80만 명 일본 각지로 동원, 군인·군속으로 36만 명 이상 동원 피해
- 모집(1939~), 관알선(1942~), 징용(1944~) 등 국가권력과 기업이 계획적 조직적으로 감행
- 강제연행(사기, 폭력적 강제 이동), 강제노동(형식적 임금, 퇴사, 이직의 자유 없음, 고문), 민족차별(대우, 임금, 노동조건)

01. 세계유산, 역사부정의 현장이 되다

2018년 대법원 판결 이후, 일본 강제동원 부정론 강화



- “일본의 불법적인 식민지 지배와 침략전쟁 수행에 관련된 일본 기업이 시행한 강제동원은 반인도적 불법행위로 간주, 강제동원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을 인정. 일본제철, 미쓰비시중공업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배상을 명령
- 일본 정부는 ‘강제상’을 빼기 위해 ‘징용공’ 대신 ‘한반도 출신 노동자’로 표현 수정,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해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라는 주장 반복
- 2021년 4월, 각의에서 ‘강제노동’이 부적절하다고 결정해 모든 일본 교과서에서 ‘강제’라는 표현 삭제

02. 지원진, 잊힌 강제동원의 역사

강제동원의 광범위한 폭력성

- 일본, 중국, 사할린, 남양군도 등 광범위한 지역으로 동원
- 한반도 내에서도 600만 명 넘는 조선인 강제동원
- 어린 여자아이들도 근로정신대로 동원, 군에 의한 일본군'위안부' 동원
- 남겨진 가족은 생계 수입이 끊겨 궁핍



02. 지원진, 잊힌 강제동원의 역사

일본 관료가 본 강제동원의 실상

“조선인 노무자를 일본으로 송출하는 실정은 인질과 악탈, 납치의 성격이 있다 보니 조선 민심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도 당연하고, 송출은 곧 저들의 기계수입의 중단을 의미하는 경우가 매우 많다.”

“징용은 차치하더라도 나머지 동원 방식 역시 완전히 납치나 마찬가지다. 이는 사전에 동원 사실을 알려 주면 모두 도망하기 때문이라는데, 이 때문에 야밤에 습격하기, 유혹해서 불러내기, 그 밖에 각종 방법을 동원한 인질과 악탈, 납치와 같은 사례가 많아졌다.

소모대용 小森泰用 「복명서復命書」 1944.7.31 (일본 내무성 직원이 보고한 조선의 상황)

기자: 노무 공출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었습니까?

다하라(田原実, 조선총독부 노무과 사무관): 수송 중에 도망치거나 애써 광산에 데려가도 도주하거나 분쟁을 일으키는 사례가 매우 많아져 곤란합니다. 그렇다고 '징용'을 당장 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반강제적인 공출은 앞으로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경찰에 신분확인을 받고 있는 동원대상자



02. 지원진, 잊힌 강제동원의 역사

피해자증언 2 "같이서 일하는 신세야"

영예로운 사원이 됐다고 정신훈련 했어

“훈련소리보다도 감시 초소가 있는 수용소 같았어요. 거기서 그냥 시키는 대로 아침에 일어나서 뛰려면 뛰고, 야하타제철소의 영예로운 사원이 되었으니 봉사해야 한다는 정신훈련이었어. 그리고 풀 깎는 훈련하고 미군이 들어오면 싸움해야 한다고 죽창 가지고 훈련하고.”



김규수 Kim Kyu-su 84세 1939년 1월 10일생

출랑 벗고서 훈도시만 차고 일해

“기속사비, 식사비 같은 것은 월급에서 내지만, 대개 옷은 그냥 쥐. 옷이러야 훈도시” 하여, 출랑 벗고서 훈도시만 차면 가 일하는데 뭐. 거기서 일거리 잘못 만나면 힘들어. 번스 불만쯤 받아야 먹나. 거기 가서 번스(대번) 안 나와, 여덟 시간을 못 참겠어?”



류기봉 Ryu Gi-bong 88세 1926년 11월 10일생

섬이니까 도망갈 생각을 못했죠

“사할린에 일단 가면 도망갈 생각은 꿈도 못 꿬요. 만약 도망가다 걸리면 죽으니까. 순종할 생각을 하지. 다카시마에서도 도망갈 생각을 못 했어요. 가기는 섬에다가 일본 애들이 꼭 깔려서, 허가 없이 배가 나가면 큰일 나니까, 그런데도 도망가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냥 해엄쳐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소식을 못 들었어요.”



손용암 Son Yung-am 88세 1926년 11월 10일생

단속반에 걸리면 반 죽어

“월급은 무슨, 돈은 구경도 못 했어. 용돈이란 게 어딴지? 밥만 먹고 살아 있는 것만으로 다행으로 생각했어. 무조건 밥이고 낮이고 일할 때도 일본 헌병들이 총 들고 감시를 하는데 어디 외출을 할 수가 없지.”



주석봉 Ju Seok-bong 84세 1934년 11월 10일생

가스가 많아서 폭발하면 다 죽어!

“탄광 속으로 들어가면 가스가 많이 발생돼. 그래서 가스 조사하는 사람이 다녀. 통에 불이 켜져 있는데 가스가 많으면 불이 더 커져. 그래서 가스가 찻는지 알지, 그래도 이따금 탄광 안에서 가스가 폭발해서 거기 있던 사람이 싹 죽어버려.”



서정우 Seo Jung-woo 84세 1934년 11월 10일생

왜 이런 지옥에 오게 됐나

“보통 다른 탄광은 신에 있는데 하시마는 해저탄광입니다. 바다 밑으로 송강기를 타고 내려갑니다. 우리가 석탄을 캐는 공간은 좁았고 제 몸이 겨우 들어갈 정도였습니다. 경 안에서 쭉그리고 앉아서 석탄을 캐는데 그 안의 온도는 굉장히 높습니다. 정말 덥고 가스도 나오고 숨 쉬는 것도 힘들고 목이 너무 말랐어요. 물은 아프고 배 속은 비웠고, 내가 무엇을 잘못 해서 이런 지옥에 오게 됐나 싶었어요.”



서정우 Seo Jung-woo 84세 1934년 11월 10일생

02. 지원진, 잊힌 강제동원의 역사

피해자증언 1 "가라면 가는거야"

이천구, 15세 야하타제철소 동원

그 당시 면사무소 호적계하고 순사하고 같이 나오는 거야. '너 이제 징용되었으니까, 며칠까지 면사무소로 오라고. 망가면 부모들이 고통을 당하니까.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고 죽으려면 죽으라고 하는거지.

김한수, 26세 나가사키조선소 동원

어디 간다는 말은 안하고 연안읍에 간다고 해서 가 보니, 헌병이 드루드론 보초를 서더라구요. 당시 한 이백여 명 정도 되지 않았나. 그냥 이복도 작업복 그대로 끌려갔죠.



트럭에 실려가는 징용자들

손용암, 15세 사할린/다카시마탄광 동원

아버지 심부름으로 속초역 앞에 갔는데, 형사가 부르더라구요. 웬 어관으로 들어가라고 그래요. 방에 들어가보니 6,7명이 와 있더라구요. 들어가 있으니까 문을 잠그고 내놓지 않는 거예요. 납치조 납치. 말 안 들으면 무조건 구타니까 경찰이라면 꼼짝을 못했어. 무조건 가라면 가고, 오려면 오고

정운진, 사도광산에 동원된 정쌍종의 아들

아버지는 마을에서 2명씩 꼭 가야한다고 해서 준비를 해서 억지로 가게 되셨어요. 연로하신 노부모님을 모시고 일하시던 아버지가 징용을 가지자 어머니가 가족의 생계를 잇기 위해 너무 많이 고생하셨다고 합니다.



02. 지원진, 잊힌 강제동원의 역사

피해자증언 3 "가장 큰 고통을 배고픔"

배한섭, 18세 나가사키조선소 동원

아침 5시면 일어났어요. 식사하고 도시락은 안 주고. 공장에 가면 콩겍데기 밥을 뭉치밥으로 만들어서 주먹밥으로 줘요. 그때는 쌀이 귀하니까 콩겍데기 하고 말하고 섞어서, 쌀이 하나씩 섞이고 그런 주먹밥을 요만큼 주지.

김한수, 26세 나가사키조선소 동원

처음에 갔을 때는 그 밥을 먹는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고. '이 새끼들이 거 사람 먹으라고 줬나?' 욕지거리나 하고, 근데 며칠 지나니까 배가 고파서 죽겠는데 어떡해? 그것도 남기는 놈이 하나도 없어.



서정우, 15세 하시마탄광/나가사키조선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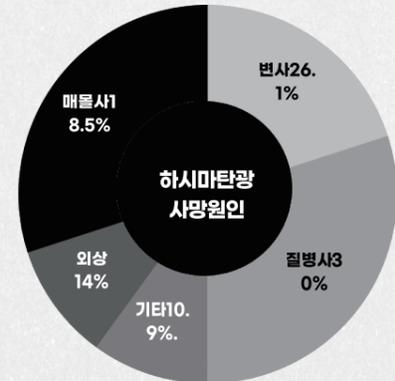
정어리 머리랑 내장도 제거하지 않고 통째로 넣어서 주걱으로 너털너털해질 때까지 저어서 쓴 게 반찬이었습디다. 그럴 격자마자 배가 아파서 화장실에 갔더니 먹은 게 그대로 나왔어요. 아직 14살밖에 되지 않은 소년이었었는데 그렇게 배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경내로 들어갔습디다.

이천구, 15세 야하타제철소 동원

콩겍데기랑 양쌀하고 스팀으로 찌가지고 얇은팬이 저를 있었잖아. 접시를 갖다 놓고 주걱으로 퍼서 접시에 담으면 300그램이야. 그걸 툭툭 문치면 요 정도밖에 안 되지. 그거하고 콩기떡이나 미소시루 탄장국 반 공기 주고, 다랭(단무지) 두 쪽 주고, 콩조림 한두 개 주고도 그게 다야.



### 열악한 처우, 예견된 사고



#### 질병사

· 폐렴과 천식 등 호흡기 질환  
 \_ 징용자들의 질병은 주로 탄광노동으로 인한 폐질환, 식량부족으로 인한 영양실조, 비위생적인 생활환경과 노동환경 때문에 발생했다

#### 매몰사

· 암사, 질식  
 \_ 탄광에서 발생하는 매몰사고에 의한 질식이나 암사의 경우이다.

#### 기타

· 익사, 심장마비, 자살, 공습으로 인한 화상  
 \_ 익사는 갯배 사고로 인한 것일 수도 있으나 탈출을 시도하다 사망한 경우를 추정할 수 있다.

#### 변사

· 외상, 탄광사고  
 \_ 주로 갯배 가스폭발이나 천장 암석이나 토사들이 무너져 내리는 낙반사고로 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 그 밖에 구타 기록행위에 의한 죽음일 가능성도 제기된다.

#### 외상

· 타박상, 골절, 장기 손상  
 \_ 맞음, 부딪힘, 끼임, 떨어짐 등의 사고로 두개골골절, 장기파열 등의 심각한 부상으로 인한 죽음이 대부분이다.

「화장火 葬인허증 및 변재變 災보고서(나가사키)」

### 공습피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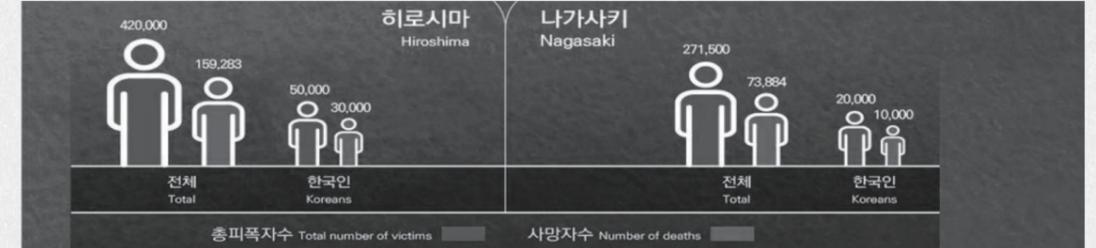
#### 야하타제철소 일대 공습

- 1944.6.16. 새벽 일본 본토를 공격한 최초의 공습
- 제철소 피해는 미미했지만, 기타규슈 5개 도시에서 129명 사망
- 1945.8.8.까지 4회 공습, 1,921명 사망, 가옥 5만 6천여 채 소실
- 야하타제철소에 동원된 김규수는 공습 후 시체 탄 냄새를 맡으며 공장으로 출근했다고 증언

#### 미이케탄광 지역 공습

- 미이케탄광이 있는 오무타 지역은 1944년 11월부터 1945년 8월까지 공습 이어짐
- 미쓰이 재벌이 운영하는 미이케탄광과 중요 화학공업지대, 일본 최대 석탄 항구인 미이케항이 있었기 때문에 미군의 목표가 됨
- 미이케탄광에 동원된 류기동은 탄광노동자 기숙사도 공습으로 완전히 파괴되었다고 증언

### 원폭피해자 10명 중 1명은 한국인



#### 전체 피폭자

- 약 70만 명 중 한국인 약 7만 명 피폭자로 추정
- 생존 3만 명 중 2만 3천여 명이 귀국했을 것으로 추산

#### 사망자

- 전체 7만 명 중 한국인 4만 명으로 추정
- 일본인 사망률(33.7%)에 비해 57.1%로 더 높음

### 원폭피해

#### 히로시마

- 1931~1945년 전쟁기간 동안 한국인 히로시마에 11.8배 증가
- 경성을 포함한 경기지역 일대에서 주로 히로시마조선소, 기계제작소, 동양공업주식회사 등에 동원
- 당일, 시내 건물 '소개' 작업을 위해 '직역 의용대'로 편성되어 동원된 한국인 다수가 피해

#### 나가사키

- 1931~1945년 전쟁기간 동안 나가사키에 12.5배 증가
- 나가사키의 경우, 전남, 황해도, 평안도, 함경도 등 특히 이북지역 동원 다수 확인
- 나가사키에 강제동원 한국인 노무자가 1만 300명으로 포함, 6만여 명 거주, 그 가운데 2만 명이 피해
- 산과 협곡으로 이루어진 나가사키 지형적 조건으로 직접 피폭자의 피해보다 원폭 투하 이후 구조활동, 복구작업으로 시내에 투입, 간접 피폭의 피해 심함

03. 원폭피해-식민지, 전쟁, 냉전의 피해자

먼저 징용당한  
재일조선인

일본 도항의 배경

- 토지조사사업, 산미증식계획
- 1917년에 1만명 넘어
- 1920년대에 증가  
: 제한된 일본 도항·여행증명서제도(1919~1922), 1932년에 부활
- 1939년 이후 격증

1895	12
1900	196
1905	303
1910	(790)
1915	3,917
1920	30,189
1925	129,870
1930	298,091
1935	625,678
1940	1,190,444
1944	1,936,843

'국민징용령' 먼저 적용

- 1942년 10월, 재일조선인에 대해 먼저 '국민징용령' 적용
- "미쓰비시조선소가 우리 한국사람을 갖다가 징용을 뽑아야 하겠는데, 한국사람들 심리도 모르겠제. 교육을 시켜보면 어떻게 있는가. 우리가 저 시험, 시범자라. 그러니깐 일본서 일본말도 좀 능숙하고, 학벌도 조금 있고 이런 사람만 300명을 뽑았어. 전국에서. 규슈에서." (1938년 4월 일본에 건너가 살다가 1943년 미쓰비시나가사키조선소에 동원된 김성수 증언, 『내 몸에 새겨진 8월』, 2008년)

03. 원폭피해-식민지, 전쟁, 냉전의 피해자

"내 몸을  
변상하라"



1967.8.6. 조선일보

- 7.10 한국원폭피해자원호협회 설립
- 피해자 실태조사, 긴급한지구호대책 수립 촉구
- 학교 운동장에서 놀다가 피폭당한 오재명 씨, "일을 하려해도 몸이 움직여주질 않는다" 팔다리와 가슴에 화상을 입어 죄어들자 몸을 쓰지 못하게 되었다.
- 히로시마 교외에서 마차를 몰던 임경택 씨, 얼굴 전체에 유리조각 세례를 받았고, 자녀들도 정상이상의 건강상태

1967.11.25. 경향신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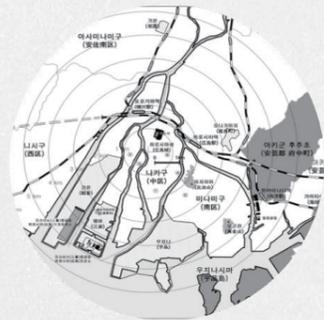
- 주한일본대사관 앞 남루한 옷차림을 한 반신불수자의 절규
- 26세에 히로시마 동양공업에 동원되었다가 피폭된 김장한 씨, "나의 병명은 정신이상, 관절염, 폐암, 혈액순환기장애, 반신불수, 뇌일혈, 빈혈증...나는 이대로 죽어야만 됩니까? 이대로 죽기 전에 정확한 진단이라도 받고 싶습니다."

03. 원폭피해-식민지, 전쟁, 냉전의 피해자

피해를 키운 민족차별

조선인 피폭자 사망률 57.1%

- 피폭자 전체 사망률 33.7%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
- 나가사키시의 경우, 사망률 27.2%에 비해 조선인 사망률 50%로 높았다.



'소개' 작업 중 직접 피폭-히로시마

- 원폭특히 당일 시내 건물 '소개' 작업을 위해 조선인 노무자 중 상당수가 시내 중심가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

구호 복구에 동원된 조선인-나가사키

- 나가사키 부상자 구호와 시내복구를 위해 투입
- 시내에서 비교적 멀리 떨어진 가와나미공업고야기시마조선소, 후카호리조선소, 해상에 위치한 하시마탄광에서도 복구작업을 위해 조선인 동원

최장섭, 15세 하시마탄광 동원

945년 8월 28일 우리 일행들은 원자폭탄 투하된 현자인 나가사키 시내에 소개(疎開)되었다... 식량고에 공자루 터진 자루가 산재해 있었다. 2년 동안이나 굶주린 우리들은 원자폭탄의 특기(毒氣)로 먹으면 죽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주어다가 물에 깨끗이 닦아 튀겨 먹었으나 다행히도 생명에 어떠한 지장 없이 벅속도 오려려 편안했다. <자서록>

03. 원폭피해-식민지, 전쟁, 냉전의 피해자

원폭피해자 피해회복 단계



1980 도입치료

- 한일협정 과정에서 원폭피해자 문제 도외시
- 한국원폭피해자협회 한국 피해자와 일본의 재한피폭자를 지원하는 모임 등 시민단체의 협력으로 한국인 원폭피해자 지원대책 촉구
- 1980~1986 349명 도입치료, 후속 대책 없이 종료



1991, 1993 일본, 40억 엔 지급

- 1990년 노태우 대통령 방일 계기, 강제동원 후속조치 촉구 논의
- 한국인 원폭피해자를 대상 의료지원금을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지급
- 2003년 재일 고립, 한국 정부가 이어서 지원



1995 미쓰비시중공업 소송 제기

- 1992 미쓰비시중공업 나가사키조선소 동원 피해자 김순걸 소송 제기
- 1995 히로시마조선소 동원피해자 46명 소송 제기
- 1998 건강관리수당 수급권자 확인 소송 제기



2018 대법원 승소

- 2000 미쓰비시중공업 대상 한국 소송 제기
- 2003 광우론 소송 승소, 한국인 원폭피해자 차별 지원 극복 계기
- 2011 헌법재판소, "정부가 피해구제를 위한 분별 해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위헌" 판결

## 강제동원 문제 해결과 원폭피해자 권리회복을 위해

- 식민주의 청산과 강제동원 역사 부정의 극복
- 피해자들이 겪은 식민지배와 강제동원의 역사 제대로 기억하기 위한 노력
- 피해자의 존엄과 인권 회복을 위한 법적 제도적 해결책 추구
- 세계유산을 비롯한 공공장소에서 강제동원/강제노동의 기억 구축



주제발표

/

# 구술로 보는 수원 및 경기지역 원폭피해자의 삶과 고통

/

소현숙 역사문제연구소 연구위원

## 구술로 보는 수원 및 경기지역 원폭피해자의 삶과 고통

소현숙

### 원폭 피해와 사회적 비가시화

#### 피폭자 귀국과 사회적 비가시화

- 1950년대 후반 광귀훈의 체험기 연재와 1964년 한국원자력병원의 조사로 비로소 국내 피폭자 존재 알려짐

#### 1965년 한일협정 체결과 피폭자 외면

- 1965년 한일협정에 한국인 피폭자 보상 조항 없음
- 양국 정부는 협정 체결로 보상 문제 종결 입장 고수
- 일본 히로시마 민단 한국에 조사단 파견
- 실태조사 의료지원 요청했으나 본격 조사는 1970년대 이후

## 원폭피해 실태조사

- 1970년대: 한국교회여성연합회 주도 실태조사, 일본 시민단체와 협력
- 1985년: 한국원폭피해자협회, 『한국피폭자들의 현황』 발간
- 1990년: 보건사회연구원, 1,982명 대상 대규모 실태조사
- 2000년대 이후
  - 2004년 국가인권위, 2013년 경남발전연구원 등
  - 피해 실태+복지 수요 조사로 확대, 구술 자료 수집 다양하게 진행
  - But, 주요 조사는 경남 합천 등 일부 지역 중심으로 한정

## 경기도 및 수원 지역 관련 기존 조사①

1979년: 한국교회여성연합회, 경기도 피해자 101명 조사

성별 분포

성별	인원	비율
남자	90명	89.1%
여자	11명	10.9%

연령 분포(피폭 당시)

연령대	인원	비율
20대	80명	79.2%
10대	8명	7.9%
10세 이하	7명	6.9%
30대	6명	5.9%

피폭지 체재 이유

징용: 80명(79.2%)

부모 따라 도일: 11명(10.9%) 일본에서 출생: 6명(5.9%)

기타: 남편 따라 도일(1명), 친척 방문(1명), 무응답(2명)

## 경기도 및 수원 지역 관련 기존 조사②

미쓰비시중공업 히로시마조선소 동원자 중 경기도 출신자 분포

지역	인원	지역	인원	지역	인원	지역	인원
가평	69명	강화	83명	개성	36명	개풍	100명
경성	65명	고양	89명	광주	73명	김포	35명
부천	40명	수원	220명	시흥	45명	안성	111명
양주	37명	양평	55명	여주	100명	연천	49명
용인	50명	이천	109명	인천	54명	장단	78명
파주	65명	평택	130명	포천	118명	불상	2명

출처: 『히로시마나가사키 조선인 원폭피해에 대한 진상조사』, 2011년, 15쪽.

주요 특징:

- 수원 출신 동원자가 220명으로 경기도 내 최다
- 평택(130명), 포천(118명), 이천(109명) 순으로 많음
- 경기도 전역에서 광범위하게 동원되었음을 보여줌

## 경기도 및 수원 지역 기존 조사③

2020년 경기복지재단, '경기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 제정 후

- 피해자(1~3세 포함) 476명 설문조사
- 24명 면접조사 병행

그러나 수원지역만을 대상으로 한 자료는 부재

## 수원시 원폭피해자 분포 및 특성

- 수원시는 경기도 내 원폭피해자 수 2위 지역
- 경기도 전체 원폭 피해자의 약 12.5%가 수원 거주
- 피해자 수는 많지만, 지역 특성 분석 부족

## 연구과정

- 경기도 원폭피해자협의회 측을 통해 수원 거주 피해 1세 12명의 명단을 입수
- 그중 연락 가능한 피해 1세 1명에 불과
- 이에 피해 2세로 대상을 넓히고 지역도 경기도로 확대, 총 6명 구술 진행
- 6~7월 동안 구술생애사 인터뷰 진행(자택 인근 카페, 수원학연구센터 등)
- 1세들의 경우 너무 어린 시절이라 기억이 명확하지 않고 2세들의 경우 부모님에게 들은 바가 많이 없어 원폭 피해를 당한 부모님의 생애를 구체적으로 알고 있지 못한 경우가 많아서 구술내용은 대체로 제한적, 한계가 많음.

## 구술자 명단(가명)

구술자 (가명)	피해 세대	현 거주지	출생 연도	출생지	원폭 피해 사실
장병수	1세	수원시	1943	히로시마	히로시마에서 3세 때 피폭 귓병으로 한쪽 귀 청력 상실
양규철	2세	수원시	1950	경기도 안성	아버지가 43년 히로시마 미쓰비시 공장으로 징용, 피폭으로 전신쇠약, 유리파편 피해, 호흡곤란, 위장병 등
이정선	2세	수원시	1971	경기도 수원	아버지가 1941년 일본 나가사키에서 출생, 5세에 피폭, 화상자국, 피부병, 신장 하나 소실
김광희	1세	부천시	1946	경상북도 김천	히로시마에 계시던 어머니 태중 3개월에 피폭, 허리 디스크와 다리 절음
이계윤	2세	용인시	1952	충남 공주	아버지가 나가사키로 징용, 17세에 피폭, 두통, 위장장애 등
최엄진	2세	수원시	1953	경기도 평택	아버지가 나가사키로 징용, 미쓰비시에 근무 1년 만에 피폭, 폐질환, 40대부터 일을 못함

## 1세의 생애사 분석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미쓰비시 공장으로 징용된 경우가 많음

해방 직후 한국으로 귀국

- 피폭으로 인해 귓병, 청력상실, 두통, 위장장애, 왜소증, 폐질환, 피부병 등 다양한 질병 경험
- 신체질환으로 제대로 된 노동 불가능, 경제적 궁핍과 자녀돌봄 방기 등 문제 발생

## 2세들의 경험

- 부모님들이 원폭피해에 관해 이야기하기를 꺼려서 부모님의 도일, 피폭상황 등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갖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 부모로부터 돌봄을 제대로 받지 못해 제대로 교육받지 못하고 어린 시절 생활형편도 어려웠음
- 2세나 3세에게도 피폭으로 인한 질병이 유전되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확인
- 아버지를 이어 한국원폭피해자협회, 경기도원폭피해자협의회 등의 활동에 참여
- 일본 미쓰비시 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에 참여하고 있는 2세의 경우 강제징용 보상 문제에 대한 관심과 열의가 높음

## 피해 2세들의 인식

- 2세대조차 이미 70대. 사망자가 늘고 생존자라고 하더라도 기억력 약화
- 건강상의 피해의 영향이 어떻게 되는지 정확히 모름. 실태 조사 필요
- 피해에 대한 지원을 받고 싶은 마음과 피해로 인한 낙인이 형성될 수 있음에 대한 두려움이 공존
- 2, 3세들에 대한 건강검진과 치료 및 지원 제도 요구. 단순한 보상보다는 실질적인 의료지원이 중요하다고 강조

## 피해보상과 정책 인식

- 원폭피해수당과 의료지원을 제공한 일본에 대해서는 대체로 만족
- 한국 중앙정부나 지자체의 피해자 정책은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거나 부족하다고 인식
- 미쓰비시를 상대로 한 강제징용 소송을 진행하는 사례 존재

## 강제동원 관련 소송

양규철의 부친 사례와 소송 경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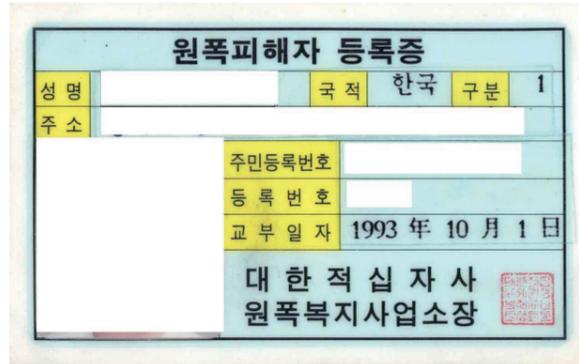
- 히로시마 미쓰비시 군수공장에서 근무하다 피폭
-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한 소송을 2004년경 시작
- 2018년 한국 대법원 승소 판결로 배상 진행

미쓰비시 대상 강제징용 공동 소송 참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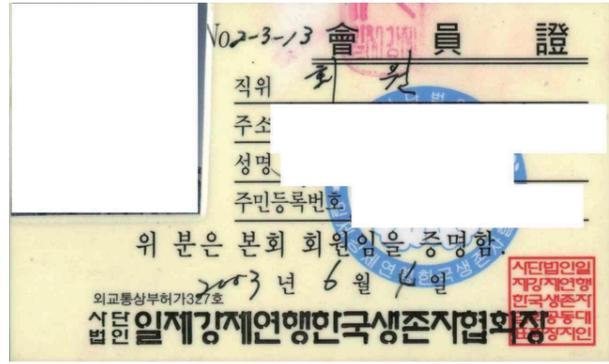
- 최엄진, 이계윤 등 2세대 3차 소송 참여 - 현재 진행중
- 피해자 가족으로서 자신의 정체성 재구성 계기
- 피해자 후손임을 숨기고 싶은 마음과 드러내야 하는 현실 사이의 갈등

# 수집자료(1)

## 원폭피해자 등록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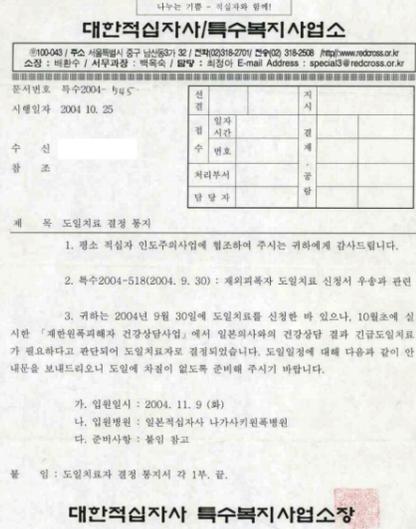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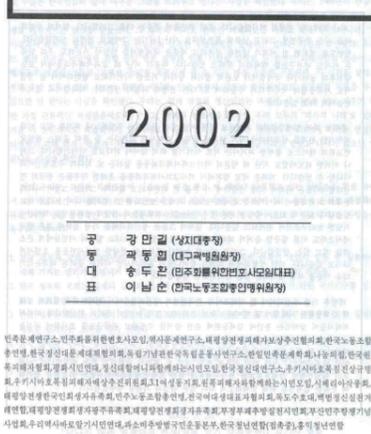
## 일제강제연행한국생존자협회 회원증



# 수집자료(2)

## 강제동원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추진위 (2002) 관련 문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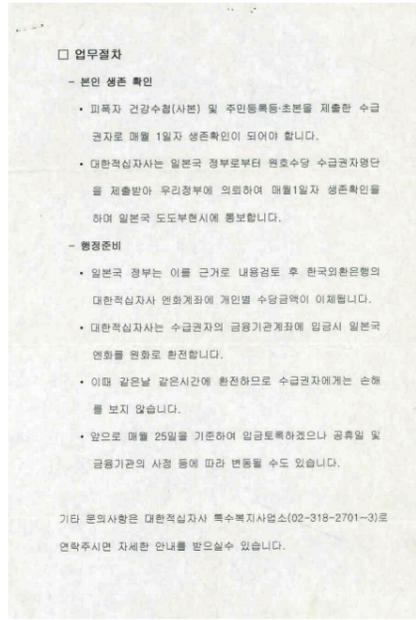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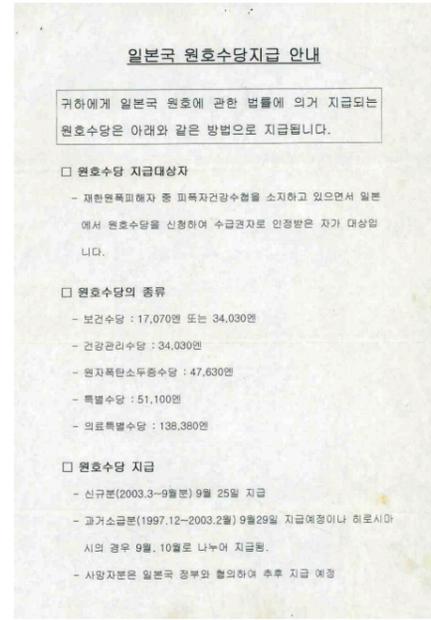
###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등에관한 특별법제정추진위원회



## 도일치료 결정 통지서(2004)

# 수집자료(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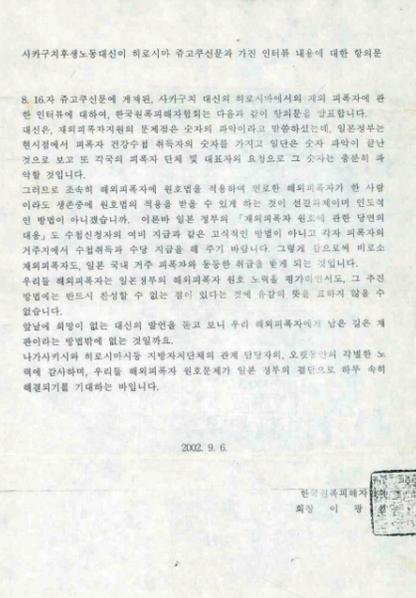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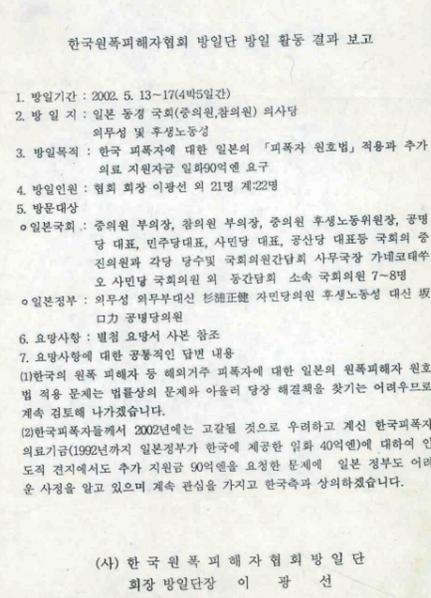
## 일본국 원호수당지급 안내



## 원호수당지급 업무절차

# 수집자료(4)

## 방일 활동 결과보고(2002)



## 후생노동대신 인터뷰에 대한 항의문(2002)

## 수집자료(5)

미쓰비시 히로시마 정용노동자  
피폭자 재판 지원 모임  
회보(2007년)

三島広島元雇用工被爆者裁判を支援する会  
会報  
**이 기자**  
第36号 2007年12月6日

この裁判闘争にかかわるすべての人の力によって、国と三菱の戦争責任を明らかにし、裁判闘争に勝利しようとの思いからつけました。

**勝訴！最高裁判決  
在外被爆者援護：国家賠償（初）**



**原告相次ぎ逝去・無念**

最高裁判決について（内容）……2～4  
最高裁判決を讀む（題材）……5～7  
原告の思い……8～9  
最高裁判決について（足立）……10～12  
最高裁判決……10～12

三菱本社交渉・議員懇談会……13～14  
最高裁判決をうけて（書未）……15  
最高裁判決をうけて（各方面から）……16～21  
新聞記事・判決要旨……22～23

- 1 -

**最高裁判決 報告集会のお知らせ**

とき：12月24日（月）14：00～17：00  
ところ：原爆資料館 地下1階 第1会議室

**三菱手帳裁判高裁第6回口頭弁論：傍聴お願い**

とき：1月18日（金）13：30～  
ところ：広島高等裁判所3階

今回は手帳裁判について報告するスペースがありませんでした。申し訳ありません。高裁によって、「被爆補償証」発行時に限る「調査補証」も実施されました。その様子報告です。

**会費納入・カンパのお願い**

当初の勝利は最高裁判決で終わりました。長い闘いのご支援に感謝いたします。しかし原告たちを強制連行・強制労働した三菱は新罪されませんでした。手帳裁判も高裁で係争中です。私たちの会の活動は今後も続きます。多くの方々の会費やカンパに支えられた活動ですが、事務職員の手出しも相当額にのぼり、会の運営も厳しさをますます感じます。会費納入・カンパにご協力下さい。 よろしくお願いたします。

三島広島・元雇用工被爆者の裁判を支援する会 会報36号 2007年12月6日 定価1部100円	【連絡先】 〒730-0047 広島市中区平野町8-15 カレントコスモ
代表 藤本恵三郎（事務局）	広島高等学庁教職員組合書記用（北村）宛付 TEL 082-244-2511
深川宗俊（広島の高裁闘争を調査する会代表）	FAX 082-244-3925
重 行雄（被爆の原爆被害者を支援する市民の会常任世話人）	郵便振替 口座 01310-3-40778
ホームページ <a href="http://ha.seikyuu.or.jp/home/mkhp/">http://ha.seikyuu.or.jp/home/mkhp/</a>	名称 広島元雇用工を支援する会
E-mail <a href="mailto:nth@ml.mngsage.or.jp">nth@ml.mngsage.or.jp</a>	
会費1年間 個人 3,000円 団体10,000円	

24

## 피해실태분석에 따른 향후 과제

### 피해자에 대한 실태 파악 및 지원체계 마련

- 1세대들은 생존자가 많지 않음. 2세대들도 이미 70대 이상. 2세, 3세대들의 피해실태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 및 실태 파악 필요
-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 2세, 3세에 대해서는 의료적 지원 필요

### 원폭피해의 역사화 및 기억문화 형성을 위한 노력 필요

- 피해자에 대한 직접 지원을 넘어서 원폭피해에 대한 사회적 기억의 형성을 위한 역사화 작업, 기념 문화 형성 필요
- 피해자 사망에 따른 자료 유실 가속화, 체계적인 자료 수집 및 정리 필요

# 광복 80년 원폭 80년, 비핵평화를 위한 국가와 시민의 과제<sup>1)</sup>

- 경기도 원폭피해자와 함께하는 비핵평화운동 -

이대수 아시아평화시민네트워크 대표

## 1 머리말

2025년은 한일 수교 60년, 그리고 광복 80년, 원폭 80년이 되는 해이다. 아시아태평양 전쟁이 연합국의 승리이자 일본제국주의의 패망으로 종결되었고, 이어 전후 처리 그리고 새로운 동유라시아의 질서가 수립되어야 했다. 일제와 나치에 맞서 싸운 연합군이었지만 전후 세계질서 수립에서 대립하게 된 미국과 소련은 냉전의 긴장 대치 국면에 처한다. 특히 조선인 피폭자는 일본 피폭자의 1/10 이상(일본 피폭자 70만 조선인 10만 추정)이었지만 일본 정부는 외면했고 한반도 남북 정부도 책임을 방기하였다. 원폭을 투하한 미국은 아예 거론되지도 않았다. 1951년 샌프란시스코대일강화조약의 영향이었다. 핵무기 개발과 사용으로 강력한 무기를 갖게 된 미국은 마셜플랜으로 유럽을 지원 부흥시키는 역할을 하면서 동아시아에서는 일본 천황제를 존치하면서 군국주의를 해체시키는 최소한의 조치에 머물렀고 한국전쟁은 동족상잔과 더불어 동아시아 냉전을 격화시켰다. 일본은 한국전쟁 특수로 급속한 경제부흥을 실현했다. 연합국은 핵무기 경쟁에 뛰어들게 되었고 원폭피해자는 뒷전이 되어 버렸다. 조선/한국인 피폭자의 외로운 피폭자권리투쟁은 일본 시민단체의 도움을 받으며 반세기 이상 지속되다 2003년 비로소 '피폭자는 어디 있어도 피폭자'라는 일본 최고재판소의 판결로 기본적인 권리로 인정받기 시작하였다.

미소 간의 핵무기 경쟁은 1989년 소련이 해체될 때까지 지속되었고 서구의 핵무기반대

1) 이 원고는 2025년 동아시아평화를 위한 역사NGO세계대회에서 본인이 발표한 원고를 기본으로 하여 가감한 것임을 밝힌다.

## 주제발표

/

# 광복 80년 원폭 80년, 비핵평화를 위한 국가와 시민의 과제 - 경기도 원폭피해자와 함께하는 비핵평화운동

/

이대수 아시아평화시민네트워크 대표

군축운동의 성과로 최고 7만~8만 기였던 핵탄두는 현재 1만 2천여 기로 감축되었다. 한반도에 불어오던 데탕트로 남한(대한민국)은 중국과 러시아와 수교를 했지만 북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미국 일본과 수교하지 못한 채 북-중-러 관계 강화에 머물렀다. 한반도 분단이 해빙 분위기를 맞이해 남북 교류가 꽃피던 시절도 있었지만 현재는 깊은 밤이 지나 새벽을 기다리고 있다.

미완의 해방 냉전의 한반도와 동북아 해빙과 긴장을 반복하고 있고 추락하는 트럼프의 미국은 굴기하는 중국과 러시아 견제에 몰두하지만 다원화되는 국제질서는 거스를 수 없는 추세이다.

한국에서는 12.3 내란이 진압되면서 새로운 이재명 정부가 출현했다. 시민이 자발적으로 나서 계엄과 내란을 중지시킨 한국 민주주의의 미래는 동유라시아 평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민주주의가 평화를 만드는 현실에 세계가 감탄하고 있다는 점을 절감하게 된다.

2025년은 일제 식민지로부터 광복된 지 80년이 되는 해이면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폭 80년이 되며 한일 수교 60년이 된다. 지나온 역사를 돌아보고 현실을 진단하며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기회와 자리가 필요하다.

## 2 미완의 광복 분단의 서막이 열린 한반도 1945년의 국제정세

유라시아 동과 서에서 독일 나치, 일본제국주의와 싸우던 연합군은 승기를 잡아가지 전후 질서를 구상하기 위해 1943년 11월 카이로에서 회담을 열어 전쟁 대책과 전후 질서에 관해 논의와 합의를 했다. 여기엔 한반도의 독립도 포함되었다. 그리고 유럽 곧 서유라시아 전선에서 승리를 굳혀가는 연합군은 동아시아 곧 동유라시아 전선에서 일본제국주의를 패퇴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 1945년 2월 얄타회담을 통해 독일의 분단 국경 조절 한반도 분단 등이 논의되고 국제기구 유엔설립을 준비하는 등 전후 국제질서를 기획하였다. 그리고 1945년 7월 포츠담회담을 통해 한반도 분단은 확실시되고 8월 원폭 투하와 소련군의 참전으로 8월 15일 일본은 항복하고 말았다. 한반도 내부에서는 전국적인 건국준비위원회가 결성되고 새로운 국가 수립을 위한 노력이 있었지만 국제질서는 냉전으로 치달으면서 미소 간에 38선을 긋고 분단으로 한반도를 관리하게 되었다. 민족이 염원했던 한반도 단일국가의 희망은 깨지고 1948년 남북 각각 정부수립을 선언하고 분단은 굳어져 갔다. 그리고 2년 후 1950년 6월 한국전쟁이 터졌다. 전쟁에서 북조선은 남진했고 다시 유엔군은 북진했지만 38선 경계를 크게 벗어나지 못한 채 3년간의 전투로 피해를

고 적대감을 안고 휴전상태로 80년이 되도록 긴장과 화해를, 교류와 단절을 반복하며 유엔에 남의 대한민국 북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독립적인 국가로 가입하여 살아왔다.

## 3 한국 원폭 피해 80년의 역사와 의미

조선이 일본의 식민지배를 당하면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일하러 가거나 강제징용으로 끌려가 전쟁에 동원되면서 미국이 투하한 원폭에 피해자가 된 지 80년이 되었다. 일본과 미국 정부의 무책임과 한국 정부의 방임 속에서 1967년 어렵게 원폭피해자 조직을 만들고 한국인(남한)피폭자 인권을 위해 도일해 체포되고 일본 시민단체의 지원을 받아 소송을 해온 서정우 님을 통해 조선인(남한) 피폭자의 일본에서의 치료권을 인정받은 성과도 있었지만 일본에 체류하는 제한에 묶여 있었다. 그리고 계속된 소송투쟁을 통해 2003년 일본최고재판소의 판결로 ‘원폭피해자는 어디에 있어도 원폭피해자’라는 일본의 거주 중인 피폭자의 법적 권리를 인정받고 일본 피폭자와 동일한 수준의 지원과 처우를 받기 시작하였다. 일본 외에 있는 해외 일본인에게도 해당되었다. 그러나 북조선의 피폭자는 조일 수교가 이루어지지 못한 채 도일치료만 인정되는 등 까다로운 조건으로 제약을 받고 있다. 히로시마 피폭자인 총련계의 이실근 선생<sup>2)</sup>을 중심으로 재일 조선인 피폭자운동의 활동은 재일 조선인의 인권신장에 기여하면서 피폭자의 존재감과 국제적으로 실상을 알리는데 상당히 기여하였다.

한국인 피폭자 1세의 생존율은 어림잡아 일본 피폭자의 20%에 불과하다. 2024년 기준 일본의 피폭 생존자는 10만 2천 명 수준이지만 한국인 피폭자는 1천 6백 명에 불과하다. 히로시마 나가사키 피폭자 중 조선인 비율이 10% 정도<sup>3)</sup>였던 점과 귀국 인구 한국과 일본의 인구 비율 등을 고려한 구체적인 조사 연구가 필요한 대목이다. 일본은 1957년 피폭자원호법을 제정하고 구체적인 지원을 해왔지만 대부분의 한반도 피폭자는 한국전쟁을 겪었고 한국 정부의 외면 속에서 관심 있는 시민단체들의 노력에 힘입어 2016년에야 원폭피해자지원법이 제정되었던 것이다. 60년의 격차가 있다. 그나마 지방자치가 시작되면서 합천과 경남 등에서 지방정부 조례로 제정되기 시작하여 2019년 이후 경기도와 서울 인천에서 원폭피해자지원조례가 제정되어 지원활동이 조금씩 이루어지는 중이다. 최근 원폭 80년을 맞으면서 평화나무합창단의 공연 ‘나는 원폭피해자입니다’와 원폭피해자를 주제로 한 연극 공연 ‘불새’가 관심을 받는 등 시민사회단체의 관심이 되살아나고

2) 이실근; 양동근. 2015. 나의 히로시마: 공생의 길, 평화의 길. 논형.  
3) 김경인. (2024). 조선인 원폭피해자 규모 추정: 변천과 새로운 추정- 일본의 원폭피해 관련 자료를 중심으로. 일본연구 제102호.

있어 다행이다.

## 4 비핵평화한일교류와 방미증언단의 방미 활동

아시아평화시민넷과 한일반핵평화연대 주도로 2013년과 2014년 두 차례에 걸쳐 평화 여행단을 통해 비핵평화한일교류를 주제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를 포함해 일본 여러 지역을 방문하였다. 일본은 원폭피해자와 관련해 가장 많은 연구와 조사 자료가 축적되어 있고 핵무기와 관련해서도 전국민적인 관심이 높은 국가이다. 특히 원폭만이 아니라 1954년 미국의 수소폭탄 실험 시 남태평양에 조업 중 피폭당한 제5후쿠류마루 사건을 겪으면서 전국적인 반핵운동이 전개되어 미국의 사과를 받아낸 경험도 있다. 그리고 2011년 3월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로 전국적인 원전 반대 반핵평화운동을 전개한 경험이 있다. 1951년 샌프란시스코 대일강화조약과 미일안보동맹에 의해 원폭 피해에 대한 미국의 책임을 요구하지는 못하는 정부와 국가적 한계도 있다. 한국은 식민지 백성으로 전쟁에 동원되어 피폭당했기에 미국과 일본을 향해 사과와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한국피폭자들은 한국 정부의 무책임성을 지적하면서 국가 폭력인 핵무기 투하의 피해자인 원폭피해자들의 인권과 권리를 주장해 왔었다. 이제는 한일의 경계를 넘어 미국-일본-한국 3자 공동의 차별화된 책임을 요구해야 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한일 피폭자비핵평화연대를 기반 삼아 지구적 차원의 핵 피해자와 만나고 교류하는 국제연대로 확장되어 가야 하는 책임이 있다.

2023년 11월 말~12월 초 처음으로 5개 도시 방미증언활동과 뉴욕 TPNW-2MSP 참석을 시작했다. 그리고 2025년 2월 3차 당사국회의의 참석을 포함한 방미증언활동이 이루어졌다.

2025년 비핵평화방미증언단(피폭 1세와 2세 지원활동가 등 10명)의 방미활동(2월17일~3월9일 시애틀과 워싱턴주 LA 뉴멕시코 아칸소 뉴욕시 워싱턴D.C)과 핵무기금지협약 3차 당사국회의(TPNW-3MSP)을 통해 2023년 3주간의 1차 방문단의 성과를 계승하고 한국 비핵평화운동의 발전에 기초하여 활동 역량을 향상시키고 있으니 희망적이다.

원폭투하 80년을 맞이하여 한국피폭자의 존재를 드러내고 세계 각국의 다양한 피폭자들(2천 회 핵실험, 우라늄 광산 핵발전소 피폭 등)과의 만남과 교류를 통해 피폭자 세계연대의 길을 모색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일본의 한국인피폭자지원회 이치바 준코 대표의 연이은 참여와 47년간의 활동에 감사드렸다.

LA에서는 일본 영사관 앞 오염수 반대 집회에 함께 참석했고 NYC에서는 토요 탄핵

집회 참가도 있었다. 한국계 단체와의 협력과 지원을 바탕으로 미국의 평화 단체를 방문해 한국 피폭자현실을 소개하고 지속적인 교류를, 미 의회 상, 하원 의원실을 방문해 보좌관을 만나 한국 피폭자의 존재와 미국의 사과 요구 그리고 핵무기금지협약에 관련해 미국의 책임 있는 행동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했다. 미주 동포들, 미국 여러 지역에서 평화 단체의 따뜻한 배려도 감사드릴 일이다. 이번 방문을 성과 있게 마치고 그 현황과 과제를 계속 이어가야 한다.

## 5 세계 첫 원폭피해자는 핵실험 지역 미국의 선주민들

2025년 2월 방미증언단이 뉴멕시코주를 방문하여 선주민에 해당하는 엘버카키 등에서 활동 중인 피폭자들을 만났다. 2023년 11월 뉴욕 방문 중 인사를 나눴던 티나 코르도바와의 연락을 통해 첫 방문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었다. 선주민 피폭자 운동을 주도하는 단체(www.trinitydownwinders.com)의 리더인 그녀는 우리를 엘버카키에 있는 핵 박물관 입구에서 만나 인사하고 자신의 집에 초청해 식사를 대접하면서 자신들이 겪은 핵실험 피해를 설명하면서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투하된 핵무기는 뉴멕시코에서 첫 실험을 했고 그래서 자신들이 그 핵실험에 의한 첫 피폭자였으며 그것은 '핵 식민주의(Nuclear Colonism)'라고 힘주어 밝혔다. 그 당시 사막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사전 공지도 하지 않았고 핵실험 후 방사능낙진이 바람을 타고 넓은 지역으로 확산되었다는 것이다. 그 이후에도 네바다 사막에서 수백 회의 핵실험을 했고 그 피해는 선주민들이 거주하는 지역에 고스란히 확산되었다. 특히 백인들이 거주하는 캘리포니아주로 바람이 불지 않는 날에 핵실험을 해 왔다는 것이다. 2023년 방사능 낙진 문제 피해를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가 미국과 일본에서 상영되었기에 실감이 더했다. 거기다가 우라늄 광산 개발을 위해 많은 선주민 노동자들이 투입되었기에 피폭되었고 그 실상을 담은 조사 자료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었다. 그리고 동생의 병원 치료 때문에 동료를 소개해 주어 함께 최초의 핵실험지 트리니티 사이트까지 방문했다.

## 6 구소련의 460회 핵실험 지역 카자흐스탄 세메이 방문과 교류

2023년 12월 뉴욕 유엔본부에 개최된 TPNW-2MSP에 참가하면서 카자흐스탄 북동부 세미팔라틴스크(카작명 세메이)에서 460회의 공중 지상 지하 핵실험을 한 사실과 그 피해자들의 존재를 알게 되었고 2025년 3월 TPNW-3MSP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실상을

알게 되었다. 활동가들이 ‘ZARA 방사능 가부장제-카자흐스탄의 여성들’ 영화를 상영하면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고 우리도 저녁 시간에는 ‘밥상연대’에 초대해 좀 더 구체적인 교류도 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사전교섭 과정을 거쳐 2025년 6월 13일~16일 중앙아시아 평화여행단이 3박 일정으로 세메이를 방문하였다. 수도 아스타나에서 항공으로 이동하여 세메이공항에 도착하니 뉴욕에서 만났던 마이라 님이 동료들과 함께 마중을 나와 주셨다. 마이라 님은 폴리곤21이라는 단체의 대표이다. 1949년~1989년간 40년 동안 세메이 근처 폴리곤이라는 핵실험지가 있고 456회의 대기 지상 지하 핵실험을 했다. 작가 올자스 솔라이메노프가 주도한 카자흐스탄 반핵 시민단체인 <네바다-세미팔라틴스크><sup>4)</sup>는 첫 핵실험 지역인 미국 네바다의 반핵운동 정신을 이어받는 세미팔라틴스크의 반핵운동이다. 카자흐스탄 내부는 물론이고 소련 지도부와 세계 각국의 국가기관·시민단체의 동조를 끌어냄으로써 1989년 세미팔라틴스크 핵실험장을 중단시키고 카자흐스탄이 독립하면서 누르술탄 대통령령<sup>5)</sup>에 의해 1991년 핵실험장은 폐쇄되었다. 소개가 필요해 주석을 달았다.

방문 기간 중 코리안디아스포라와의 만남 자리를 마련해 주었다. 둘째 날 오전에는 아바이 박물관을 방문했는데 마이라 님과 대학 졸업반 라크지모프 아킴잔(한국명 지호)이 마중을 나와 박물관 직원의 안내를 소개해 주었다. 아바이는 카자흐스탄의 작가이자 국민 영웅이다. 세메이에 거주하는 고려인들 중 네바다-세미팔라틴스크 운동에 참여한 고령의 여성분이 반갑게 인사해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 손자와 통화까지 했다. 그리고 피폭자를 추모하는 ‘죽음보다 강한’ 기념탑이 세워진 공원을 방문하여 함께 추모도 했고 회의실에 모여 핵실험 피해자 거주권 증진을 위한 비영리단체 DOM 활동 소개와 세메이 피폭자들과의 대화 교류 시간을 가졌다. 피폭자 사례를 소개했는데 피폭자로 인정받아 정기적으로 지원금을 받고 있는 남성도 있는 반면에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사례자도 있었다. 150만 명이 피해자로 확인되었다고 했다. 셋째 날은 이르티쉬강변 자연탐방과 야유회를 함께 가서 물놀이도 하고 춤추는 시간도 가졌다. 시민주거사업을 지원하는 DOM의 대표인 마이라 님은 떠나는 날 아침 집으로 우리 방문단을 초대해 환송식도 해 주셨다. 러시아어

를 몰라 직접 소통을 어려웠지만 따뜻한 마음은 느껴졌다.

카자흐스탄은 독립 후 누르술탄 대통령 주도로 보유했던 다수의 핵무기를 러시아에 넘기고 미국의 지원을 받는 방안을 통해 핵무기보유국임을 포기하고 경제발전으로 나아갔던 것이다. 세미팔라틴스크 핵실험장 부지와 그 주변 지역에는 이미 다량의 방사성 물질이 방출되었다. 방사능 낙진 등 핵실험으로 방출된 오염 물질이 핵실험장과 그 주변 지역의 대기, 토양, 수질을 오염시켰고, 핵실험 자체와 핵실험으로 오염된 환경에 직접적으로 노출된 이 지역 거주민은 이후 회복할 수 없는 심각한 신체 및 건강상의 피해를 보게 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핵실험장 폐쇄 이후 2010년대 중반까지 카자흐스탄 정부는 국제적 지원과 국내 역량을 동원해서 핵실험 과정에서 발생한 방사성 물질로 인한 이 지역의 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다. 카자흐스탄 정부는 상당히 해결되었다고 했지만 해당 지역에서는 그러한 정부의 견해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 UNDP와 같은 국제기구, 민간 환경운동단체, 카자흐스탄 국내외의 일부 언론은 세미팔라틴스크 핵실험장과 그 주변 지역에서 발생한 방사능 오염 문제를 해결되지 않은 현재진행형인 문제라고 보고 있다. 즉, 방사능 오염과 그에 따른 위험이 거의 사라졌다는 정부의 주장과는 달리, 세미팔라틴스크 지역에서 방사성 물질이 인간과 자연에 끼치는 악영향<sup>6)</sup>은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크게 남아 있다는 것이다. 역사NGO포럼은 2026년 7월 역사NGO세계대회 일정 중 세메이를 방문해 좀 더 알고 교류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 7 한국원폭피해자 국제민중법정 핵 오염수, 우라늄 광산, 핵발전소 반대운동에서의 협력

2026년 4월~5월에 유엔본부에서 개최될 NPT 5차 회의 시기에 맞춰 한국원폭피해자 국제민중법정이 개최될 예정이다. 한국에서 평통사(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가 중심이 되어 긴 시간 준비해 온 활동이다. 애초에는 1세로 한정했고 현실 법정에서의 소송을 준비했다가 1세에서 2세까지 포함되는 원고단의 구성 민간법정을 성과 있게 준비하는 노력 등이 진행되고 있어 관심과 기대를 받는 중이다. 2023년 6월 합천에서 첫 준비 대회, 2024년 6월 히로시마에서 준비 대회, 2025년 3월에는 뉴욕에서 준비를 위한 토론회도 개최되는 등 준비에 주력해 오고 있어 관심을 갖고 참석해 왔다. 비행평화한일교류단 그리고 방미증언단, 나아가 비행평화시민연대 차원에서도 협력하고 연대해 왔다. 그리고

4) 1989년 올자스 솔라이메노프 주도로 작가 회의를 통해 그리고 카자흐스탄과 소련 소비에트연방회의에서 논의되었다.  
 5) 대통령령 409호는 다음과 같이 네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양승조. (2023). 「세미팔라틴스크 핵실험장 폐쇄와 <네바다-세미팔라틴스크>의 반핵 활동」 참고.)  
 1. 세미팔라틴스크 핵실험장을 폐쇄한다.  
 2. 카자흐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 장관회의는 소련 국방부 장관 및 소련 원자력산업부와의 합의에 따라 세미팔라틴스크 핵실험장을 연방-공화국 학술-연구센터로 전환한다.  
 3. 1949년에서 1962년 사이에 진행된 공중 및 지상 실험이 세미팔라틴스크 핵실험장에 인접한 지역의 주민 건강에 해를 끼친 것을 고려해서, 연방의 부서들과 함께 피해를 본 카자흐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 시민에 대한 보상금 지급의 액수와 절차를 결정한다.  
 4. 카자흐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 내각은 공화국 영역 내에서의 핵폭발 수행에 참여한 연방의 부처 및 기관들과 함께 연방 출연 자금의 지정된 목적에 부합해서 핵실험장에 인접한 세미팔라틴스크주(Семипалатинская область), 카라간다주 (Карагандинская область), 파블로다르주 (Павлодарская область)의 지역들에서 사회경제적 발전, 주민의 생활 여건 및 의료 편의의 개선을 위한 계획을 승인한다.” (Картоев 2001: 6)

6) 1992년까지 조사된 자료에 따르면, 세미팔라틴스크 핵실험장에서 진행된 핵실험으로 인해 (동카자흐스탄 지역에 110만 명, 카라간다주에 48,000명, 파블로다르주에 52,000명 등) 약 120만 명이 방사능에 피폭되었다(Акимбекова 2011: 13, 14; Хожина 2011: 46-47). 다른 자료에 따르면 피해자 수는 더 늘어나서, 이곳에서 진행된 핵실험과 관련해서 피해를 본 것으로 공식 인정받은 사람은 132만 3,000명에 달한다(양승조. (2023). 「세미팔라틴스크 핵실험장 폐쇄와 <네바다-세미팔라틴스크>의 반핵 활동」 참고.)

2026년 11월로 예정된 TPNW-MSP(핵무기금지협약 당사국회의)평가회의를 대비해 한국 내에서 그리고 미국에서의 역할과 연대를 위한 역할도 준비해야 한다.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 반대운동 그리고 우라늄 광산 채굴과 피폭 노동자 문제를 연계하면서 비핵을 위해서는 핵무기만이 아니라 핵발전소 나아가 원료인 우라늄 광산 문제까지 살펴 대응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게 된다. 그것은 지구적 차원에서 이루어진 핵 카르텔들의 역할이었다. Global Nuclear Regime 곧 세계 핵 체제 특히 핵무기의 위력에 환호했던 군산복합체와 미국민들, 미국이 시작한 핵무기개발과 투하는 전 세계적으로 핵무기 경쟁을 촉발했고 냉전으로 격화되면서 확산되었지만 서구 중심의 반핵운동으로 핵무기 감축은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 핵발전소 증대는 둔화되었지만 축소는 더딘 상황이다. 특히 기후 위기를 이유로 재등장하려고 한다.

지난 5월 대만에서 개최된 32차 반핵아시아포럼 참가 중 5월 18일 0시를 기해 타이완은 원전 제로를 단행했고 우리 참가자들은 타이완 전력 공사 앞마당에서 함께 축하했다.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이루어진 쾌거였다. 그러나 미국의 핵 박물관에서는 핵발전이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에너지, 미래를 풍요롭게 할 에너지라고 주장하는 전시를 하고 있다는 점도 염연한 현실이다.

## 8 핵식민지와 핵식민주의를 넘어서는 핵진실, 핵정의운동

미국의 첫 핵실험지 네바다사막과 수폭 실험지 비키니섬과 마샬군도, 구소련의 카자흐스탄 영국의 호주 프랑스의 알제리와 폴리네시아 중국의 신장 위구르 등 모두 제국주의 시절 식민지에서 또는 내부 식민지에 해당하는 지역이다.

2025년 2월 미국 뉴멕시코주를 방문해 피폭 2세로서 활동 중인 여성 지도자(티나 코르도바)로부터 자신들은 핵 식민지(Nuclear Colony) 상태라는 증언을 들었다. 핵실험을 당한 피폭 지역 피해자라는 점 그리고 네바다 지역 등 우라늄 광산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선주민 원주민이거나 멕시코인들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뉴욕과 아칸소에서 만난 마샬군도 피폭 후손들도 유사한 이야기를 했다. 핵식민주의(Nuclear Colonism) 라고 비판하며 핵정의(Nuclear Justice)운동을 펼치는 중이라고 밝혔다. 핵 강대국들이 가한 핵 피해는 외면한 채 자신들을 들러리로 세우는 문제를 지적하면서 핵 피해에 대한 실상과 책임을 공유하면서 핵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으로 핵진실(Nuclear Truth)활동도 진행하고 있다. 핵의 실상 특히 핵 피해의 실상을 제대로 파악하고 알리기 위한 활동인 것이다.

이번 두 차례 방미증언단 활동을 통해 핵 피폭 피해지역 젊은 세대가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2025년 뉴욕회의 기간 중 4일 동안 저녁에 초대해 '밥상연대'를 하면서 교류 활동을 했고 영어 소통이 원활한 청년들이고 그중에는 석박사 과정 중이라 이론적 기초도 갖추면서 진행되는 양상이었다. 1세대는 대개 핵실험의 피해를 직접 겪어야 했던 세대였지만 후세대는 세계화와 더불어 자유롭게 국외에서 공부하면서 이론적 기초를 갖추고 새로운 사실에 대해 개방적으로 받아들이고 국제교류의 경험을 갖추고 있어 훨씬 적극적이고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1980년대 유럽과 북미를 중심으로 미소 간의 전략무기(핵) 감축운동(START)이 활발해 7만~8만기의 핵탄두에서 1987년을 정점으로 핵무기 1만 2천 기로의 감축 성과를 냈다면 ICAN 주도로 핵무기금지협약을 가능하게 한 전 세계 NGO들의 운동 그리고 유엔이 주도하는 핵무기금지협약당사국회의(TPNW-MSP)가 함께 모일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내는 단계로까지 발전한 것은 분명했다.

## 9 경기도원폭피해자협의회 창립과 원폭피해자지원조례 제정

2009년 강제 병합 100년을 앞두고 경기시민사회포럼과 일본 교토 시민단체와의 교류가 시작되어 강제 병합 1백 년 평화통신사를 추진하게 되었고 그 일정 중에 합천원폭피해자를 방문하는 계획을 세우게 되었다. 준비 과정에서 처음으로 한국 원폭피해자와의 만남이 있었다. 만남을 시작한 후 2010년 평화통신사로 부산에서 합천을 거쳐 경기도와 서울까지 그리고 그 이듬해에 한국에서 일본으로 평화통신사로 방문했다. 그런 과정에서 몇 년 후 경기도 원폭피해자와의 만남이 시작되었다.

원폭피해자협회 기호지부라는 이름으로 강제징용 소송을 했던 분들과 후손들이 2세회 기호지부라는 이름으로 모이고 있었다. 일제 말기인 1938년 이후 평택 지역에서 강제징용으로 많은 분들이 일본 히로시마로 끌려갔고 그래서 피폭을 당했던 것이다. 그래서 경기도 내 연대활동을 해 왔던 경기도민주시민교육단체 등과 함께 준비하며 의논해 1세와 2세를 포함해 경기도원폭피해자협의회를 만들기로 논의해 2019년 2월 창립이 되었고 사단법인화를 추진해 2022년 12월 승인 등록 완료하였다.

한편 창립을 준비한 2018년부터 경기도원폭피해자지원조례 만들기를 모색해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를 방문하고 당시 위원장이었던 정희시 의원을 중심으로 복지정책과 담당자들과 논의하면서 2019년 1월 토론회도 개최하였다. 준비 과정을 거쳐 7월 6일 보건복지위원장인 정희시 의원의 대표 발의로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원폭피해자지원조

례가 제정되었다. 그리고 서울과 인천에서도 지원 조례 제정이 추진되어 모두 제정되었다. 경기도협의회는 독자적인 조직체로 1세와 2세 3세 모두를 포괄하고 있으며 원폭 투하 주체가 미국임을 명기하였다. 피해자 단체와 의회와 전문가 행정이 참여하는 15인 이내 지원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였다.

수원에서도 지원 조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면서 반갑고 기대된다. 원폭피해자지원은 복지에서 근접성은 매우 중요하고 모범적인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고 경기도와 수도권으로 확산도 기대하게 된다.

최근에는 정경자 의원 발의로 경기도의회에서 개정안을 통과시켜 위원장 호선 회의 개최수 확대 역사 정리 사업 등 피해자들이 원해 왔던 사안이 수용되어 결과적으로 진일보할 수 있을 것이다. 원폭피해자지원법은 2016년 제정되었다. 긴 시간동안 많은 단체들이 함께 노력하고 국회의원들의 참여를 통해 이룬 성과임이 분명하다. 일본과 60년의 시차가 있고 보건복지부는 70년간 직무유기했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원폭피해자에 후손을 포함하는 근거를 확인하기 위해 25억 예산으로 피폭자 유전자 코호트 검사는 결과를 공개하지도 않고 있으며 윤석열 정부에서는 그나마 지원위원회 회의마저도 없애 버렸다고 한다. 이재명 정부는 과거 정부와 달라진 모습을 보여 주어야 한다.

## 10 한반도 비핵화와 세계의 비핵지대화의 관계 그리고 핵무기 없는 세계

북한은 50기 이상의 핵무기와 이동 수단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실질적인 핵보유국 지위를 지향하고 있고 신생 핵보유국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한국에서는 관심 없이 지나쳤던 ‘한반도 비핵지대화’ 논의도 새롭게 검토해야 할 과제이다. 이미 세계적으로 남미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카자흐스탄) 몽골 등은 비핵지대화 되어 있다. 비핵지대화는 핵무기를 제조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과 주변 핵보유국이 사용하지 않는다는 약속도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핵무기금지협약(TPNW)을 결의한 2017년 유엔총회에서 122개국 찬성표를 던졌고, 이어서 50개국의 비준을 통해 발효한 지 4년이 지나고 의회의 동의를 받아 비준한 국가도 73개국으로 증가하고 있다. 핵무기 금지에 대한 세계 여론이 우호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미국 내 다양한 시민 평화 단체의 움직임도 활발해지고 있다. 의회 의원들의 관심사가 되면서 비/반핵 의원 모임 또는 국제연대 차원의 비핵평화의원포럼 등도 가능해지고 있어 기대가 된다.

7) 한겨레신문에 게재된 정육식 평화연구소 대표의 여러 글 참조.

한국과 일본은 미국의 핵우산 아래 머물면서 핵무기를 지지해왔고 더 나아가 유엔의 군축위원회와 ICAN이 주도하는 핵무기금지협약에 반대해 왔다. 나토도 러시아의 핵무기 위협에 대응하면서 그러한 입장이었다. 그러면서 내로남불식으로 북한 핵무기 반대 좀 더 적극적으로는 한반도 비핵화라는 상반된 주장을 펼쳐 왔다. 그리고 시민 운동이나 평화운동 차원에서도 핵무기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지도 못했고 문제제기 하기도 어려웠다. 한미동맹과 분단 상황이 초래한 핵맹상태에 빠져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한편으로 핵발전소(원전)와 방폐장 주변 지역을 중심으로 건설 반대 감시활동 인근 주민 및 원전 노동자 피폭 문제 등 반핵운동 탈핵운동이 치열하게 전개된 역사적 경험도 있고 진행 중이기도 하다. 특히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 이러한 반원전운동은 기후 위기와 환경운동 차원에서 활성화되고 있어 희망적이기도 하다. 한국의 경우 원전은 모두 해안가에 설치되어 있고 소멸해 가는 지역에 설치되어 대도시와 수도권에 전력을 공급하는 상태이다. 인구 과반수가 몰려 사는 수도권 시민들은 원전 문제에 대한 인식이 저조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 11 마무리

비핵평화방미증언단은 1세와 2세 피폭 당사자가 중요했다. 방문 지역에서 증언자의 이야기를 영어로 전달하고 때로는 일본어로 소통하는 것이 필수적이었다. 그래야만 우물 안 개구리 신세를 벗어나 세계의 피폭자와 교류하고 연대할 수 있는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권은 준비되지 않아 아쉬웠다. 그리고 지원단체 평화단체의 역할을 하는 활동가의 참여가 필수적이었다. 특히 국제연대를 위한 영어 사용이 자유로운 참가자가 필수적이다. 관련 자료를 찾고 해외 활동가들과의 소통은 많은 수고를 해 주었다.

20세기 중반에 열린 핵무기 시대는 인류와 자연 곧 지구생태계에 심각한 위협이 되어 왔다. 후쿠시마핵발전소 사고는 원전안전신화의 허구를 드러냈고 후쿠시마를 비롯한 핵오염수 방출은 인류와 지구생태계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고 세계 곳곳에서 반대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한국과 일본 미국 카자흐스탄 그리고 호주와 남태평양 도서 국가들의 피폭자와 시민들이 연대하여 핵피해자의 목소리를 내면서 UN핵무기금지협약(TPNW)운동에 참여하는 전 지구적 비핵평화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2045년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핵무기를 투하한 지 1세기 1백 년에 즈음하여 핵무기 없는 세상을 실현하는 인류와 자연의 공생 지구적 생태문명적 비전을 실천해 갈 필요가

있다.

2026년 11월 말 핵무기금지협약 당사국회의(TPNW-MSP) 평가 회의가 뉴욕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트럼프는 푸틴과 함께 미 러 중 전략핵무기 감축을 논의하려고 한다. 전략핵무기의 불요성을 인식하고 전술핵무기로 방향을 선회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미국은 이미 잠수함에 실전배치를 했다.

한국비핵평화연대 결성을 추진하면서 원폭 피해자와 함께 하는 일은 가장 기본적이다. 특히 2세대인 후손회의 참여와 적극성이 필수적이다. 부산과 경남, 합천과 대구 등 영남에 집중되어 있던 피폭자들의 상당수가 수도권으로 거주이전이 이루어진 상태라 경기도를 시작으로 서울 인천까지 활동력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울러 시민단체 평화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활동력, 특히 국제연대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방안이 필요하고 이 모든 일들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실무력과 뒷받침이 되는 재정 곧 비핵평화기금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일 것이다. 한국은 12.3 내란과 오래된 식민지와 군사독재의 유산을 극복하는 민주주의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다. 그리고 이제는 남북을 넘어 동북아와 세계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갈 수 있을 것을 기대하게 된다.

제 12회 수원학 심포지엄

# 종합토론



종합토론

/

# 일제강점기 한국인 강제동원 및 원폭 피해자에 대한 시민의 인식 확대와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

박철하 전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전문위원

## 일제강점기 한국인 강제동원 및 원폭 피해자에 대한 시민의 인식 확대와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박철하 전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전문위원

원폭 투하 80년, 한국인 원폭 피해는 4세대로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에 대해 우리 사회는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고, 관심 또한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사)한국원폭피해자협회에 따르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원폭에 따른 74만 명의 피해자 가운데 조선인 피폭자가 10만여 명에 달하고 사망자가 5만 명으로 추산되며, 한국으로 돌아온 원폭 피해자는 4만 3천 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202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피해자협회에 모두 1,643명이 등록되어 있다고 한다.

합천에서는 8월 5~6일에 제14회로 <2025 합천 비핵·평화대회>가 열린다. 그리고 한국인 피폭자와 후손들의 아픔을 넘어 평화를 말하는 연극 '불새'가 8월 11일 대구에서 개막된다. 이러한 가운데 수원시정연구원에서 해방 80주년을 기념하면서 원폭 피해의 역사를 재조명하는 포럼을 개최함은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하겠다.

수원시정연구원에서는 2024년 8월 <강제동원 및 원폭피해자 지원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이어 2025년 해방 80주년을 맞이해 <해방 80년, 원폭을 말하다-기억으로 잇는 평화와 정의의 연대>란 주제로 수원학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역사적 연구는 물론 시민의 공감과 참여 확대를 위해 노력하심에 감사를 드린다.

“원폭 피해에 대한 역사적 의미를 조명하여 역사적 정의 실현 방향을 모색하고, 미래 세대를 위해 역사적 교훈 및 평화 연대를 향한 실천적 행동을 제안”하기 위한 원폭 피해자 포럼에 참여하여 ‘평화와 정의의 연대’에 함께 할 수 있게 되어 감사하게 생각한다.

지난 윤석열 정부는 한국의 식민지배에 대한 일본 정부의 과거사 관련 요구를 모두 수용하고 그에 입각한 한일 과거사 청산 문제를 해결해 왔다.

윤석열 정부는 ‘냉전적 역사인식’에 매몰되어 독립운동의 주요 세력의 하나였던 좌익의 반일투쟁을 배제하고 이승만 중심의 정부 수립을 대한민국 ‘건국’의 정통으로 강조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일본과의 관계 개선이란 명분 아래, 남북의 이데올로기적 대립과 ‘국가 정체성’을 언급하면서, 독립을 위해 일제에 투쟁했던 흥범도의 역사적 사실마저 왜곡

또는 부정하였다. 육사 교정에서 흥범도 장군 흉상을 철거하고, 백선엽의 국립현충원 안장 기록에서 ‘친일반민족행위자’ 문구를 삭제하는 등 항일 독립운동을 계승한다는 대한민국 헌법 전문을 무색하게 하는 행동들을 거리낌 없이 자행하였다.

한편, 1965년의 ‘한·일 청구권 협정’ 체결은 일본의 식민지배에 대한 진정한 사죄와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배상의 올바른 해결을 하지 못하게 하는 족쇄가 되었다. 심지어 박근혜 정부는 2015년 한일 외교장관 합의에서 ‘청구권 문제가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되었으며, ‘위안부’ 합의에서도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됨을 확인한다고까지 했다.

한국의 대법원은 2018년 10월 30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미쓰비시, 일본제철 등의 손해배상 책임을 확정하는 판결을 한 바 있다. 대법원에서 판결 결과에 대해 이행이 미뤄지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정부는 피해 당사자의 동의도 없이,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빌미로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단이 조성한 재원으로 일본 피고 전범기업을 대신해 우선 변제한다는,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제3자 변제’ 방안을 발표했다. 이어 제54차 유엔인권이사회에 ‘일본 정부가 위안부 및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공식 사과를 했다.’라는 내용의 의견서도 제출했다. 그리고 외교부는 2024년도 예산안에서 ‘일본군 위안부’, 원폭 피해자,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 등 한·일 과거사 대응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해 버렸다.

한국 정부의 이와 같은 태도와 관련하여 국제사회와 국제법의 발전 방향이 국가주의보다 개인의 인권신장을 지향하고 있음에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 특히 한국의 법원은, 국제법의 발전 추세와 국제사회의 흐름에 맞게, 일본이 식민지배와 침략 전쟁 중에 자행한 반인권적이고 반민주적인 강제와 폭력의 피해자 개인의 인권 문제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그리고 강제노역의 피해자는 개인 위자료 청구권을 가지고 있고 정부는 이들에 대한 외교적 보호권을 가지고 있음을 명시한 한국 대법원의 판결에 기초하여, 한국 정부는 피해자 위자료 청구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하고, 일본 정부에 배상을 촉구해야 한다.

일본의 식민지배와 침략전쟁 및 강제동원 피해자 구제에 있어서 원폭 피해자 문제 해결 또한 중요한 과제이다. 한국의 원폭 피해자는 미국의 원폭과 일본의 강제동원에 의한 ‘이중의 희생자’이다. 이것은 원폭 피해자에 대한 매우 중요한 인식의 출발점이다. 피폭으로 희생된 수많은 한국인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있을 수밖에 없었던’ 가장 커다란 요인은 바로 일본에 의한 식민지배와 강제동원에서 비롯되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원폭의 피해는 직접 피해자 자신들뿐만 아니라 2~3세대까지 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정순 한국원폭피해자 2세 환우회 회장은 “(원폭)피해자들은 태어나는 날부터 전쟁이

시작된다. 끝없는 전쟁이다. 내가 죽어도 후손들이 고통을 받을 수 있다. 이 전쟁에는 끝이 없는 것 같다.”라고 얘기한 바 있다. 2016년 원폭피해자지원법이 제정되었고 2019년 이후 경기도와 서울, 인천 등지에서 원폭피해자지원조례가 제정되었지만, 원폭 피해 2~3세대들은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없다는 이유로 여전히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원폭 피해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한반도는 물론 세계적으로 핵 보유를 통한 전쟁억제력이 강화되고 있다. 체르노빌 원전 사고에 이은 후쿠시마핵발전소 사고는 원전이 안전하지 못하며 인류와 자연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고 세계적으로 원전 반대운동의 확산을 가져왔다. 핵무기 없는 세상을 만들어 인류와 자연이 공생하는 생명 평화 세상을 위해 원폭 피해자와 함께 비핵평화를 위한 국가와 시민의 국제적 연대를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할 것이다.

김승은, 소현숙, 이대수 선생님의 발표문을 통해 세계유산 등록에서 강제동원과 원폭 피해를 배제하려는 일본의 몰역사적이고 반인권적인 행태, 원폭 피해자들의 고통스러운 삶의 현실, 비핵평화를 위한 국제연대의 중요성 등에 대해 잘 이해할 수 있었다. 이상의 내용과 관련하여 저의 고민의 범위 내에서 세 분의 고견을 듣고자 한다.

## 1 일제의 강제동원 및 강제노역 사실이 국제협약상 금지된 ‘강제노동’의 사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하여

일본은 침략전쟁과 강제동원 및 강제노동에 의한 자국 내 산업화 유산의 세계유산 등재를 통해 국제사회에 자신들의 ‘침략전쟁과 인권유린’의 역사부정을 행하고 있다. 일본 국내적으로도 한일문제와 관련하여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한 완전하고 최종적인 해결을 주장하고, 식민정책에서 강제성을 내포하는 ‘징용’의 표현은 물론 ‘강제’라는 표현 자체를 교과서에서 삭제하는 등 과거 식민지배의 폭력성을 지워나가고 있다.

한국 정부는 일본의 식민지 지배 및 침략 전쟁의 범죄에 면책을 주고, 불법적인 일본 정부의 반인류적이고 반인권적인 식민통치에 대한 한국 사법부의 판결을 무력화시키며 일본 정부의 입장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즉 한국 사법부가 일본 전범기업으로 하여금 일본의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도록 한 결정을, 지난 윤석열 행정부가 나서서 일본 전범기업이 아닌 한국 기업이 대신 변제하도록 한 것에 대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2012년과 2018년, 한국 대법원은 일본 정부의 주장이 국제법적으로 위법하고 무효라

며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특히 대법원은 판결의 법적 논거 가운데 일본이 1932년 이래 강제노역금지조약의 회원국으로서 국제법을 위반하였다고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일본 정부는 징용과 징병, 근로정신대, 위안부 등의 강제동원 및 강제노역 사실에 대하여 국제협약상 금지된 '강제노동'의 사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강제노동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일본 주장의 부당함을 밝히고 세계 여러 나라와 국제기구를 설득하기 위한 우리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행사에서 민중법정 원고 중 한 명인 한정순 선생께서 하신 증언은 원폭 피해자를 위한 해결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하고 있다. 그 내용을 그대로 옮기며 토론문을 마치고자 한다.

## 2

### 미국의 원폭 투하 책임에 대한 한국 원폭 피해자들의 요구에 대하여

지난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의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 내 한국인 원폭희생자 유령비 참배와 원폭 피해 동포 초청 간담회 개최 등을 했지만, 강제동원에 따른 일본의 전쟁 범죄와 미국의 원폭으로 인한 피해 등 두 국가의 책임과 피해 문제에 대한 배상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았다. 1991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시한 한국인의 <원폭피해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일본의 식민통치 아래 어려움 직면해 먹고 살길을 찾아 떠난 생계형 이주와 징용·징병·정신대 등 일본의 강제동원에 의한 피폭자들이 대다수였음을 알 수 있다.

현재 '원폭국제민중법정실행위원회'는 일본과 미국 정부를 향하여 “국가의 책임을 명백히 밝히고 원폭 희생자들과 유가족들에게 진정한 사죄”를 요구하고 있다. 나아가 2026년 미국 뉴욕에서 한국 원폭 피해자를 원고로 미국의 핵무기 투하 책임을 묻는 국제민중법정 개최를 계획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일본은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폭을 투하한 미국에 대하여 자국민의 '원폭의 피해'만을 강조하고 있다. 한국의 원폭 희생자들과 유가족들이 미국에 대하여 원폭 투하의 책임을 어떠한 방식으로 요구해야 할 것인지 고견을 듣고자 한다.

한국 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를 막론하고 일본의 한국 식민지배와 강제동원, 그리고 미국 및 일본에 의한 원폭 피해자들에 대하여 적극적 해결의 의지를 보여주지 않았다. 식민지배 및 강제동원, 과거사 청산 관련 인권침해는 과거 및 현재 한국, 일본, 미국의 법적 행태를 볼 때 개별 국가나 국제정치적 이해에 맡길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식민지 지배와 강제동원, 원폭피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식민지 지배 및 전쟁 인권 피해자와 정부가 함께 '이행기 정의'의 실현에 나서야 할 것이다.

2025년 3월 4일 원폭국제민중법정 국제조직위원회가 유엔본부 인근에서 개최한 부대

---

## [한정순 선생의 증언]

저는 한국원폭피해자 2세 환우회 회장인 한정순입니다. 저의 부모님은 일제의 가혹한 수탈에 못 이겨 일본으로 건너가 히로시마에서 14식구가 함께 살았습니다. 원폭 투하로 인해 할머니와 삼촌들은 화상을 입고, 어머니는 임신 중에 피폭을 당했습니다.

피폭 이듬해에 부모님은 고향인 한국 합천으로 돌아왔으나 태내 피폭자였던 오빠는 피폭 후유증으로 1년 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우리는 모두 6남매입니다. 나의 형제 모두가 원폭 후유증으로 인한 질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뇌경색, 심근경색, 협심증 등 온갖 질병을 겪고 있으며, 막내는 젊은 나이에 치아가 다 빠지기도 했습니다.

육 남매 중 다섯째인 저는 어릴 때부터 다리가 아프기 시작했고, 20대에 들어서니 제대로 걷지도 서지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결혼 후 낳은 첫 아이는 뇌성마비를 갖고 태어났습니다. 아이를 낳은 후 다리의 통증은 더욱 심해졌고, 진단 결과 '대퇴부 무혈성 괴사증'으로 고관절이 괴사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잘 서지를 못하니 땅바닥을 손으로 밀며 다녀야 했습니다. 방바닥은 까진 손에서 난 피로 흥건했습니다.

간신히 도움을 받아 인공관절 수술을 했지만 영구적이지 않았습니다. 이후 6번의 재수술과 자궁근종 수술, 담낭 제거 수술 등 12차례의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핵무기의 피해는 잔인하게 대물림됩니다. 한국인 원폭 피해자 2세대들은 부모님이 원폭 피해자라는 이유로 평생 피폭의 유전으로 인한 고통을 당하면서도 원폭 피해자로 인정조차 받지 못한 채 고통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원폭 2세 환우회 회장으로서 저의 아픔만이 아니라 2세 환우들을 돌보며 그들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끌어안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세상을 금방 떠난 환우들을 보면 가슴이 미어집니다.

그러나 전쟁을 일으킨 일본과 핵무기를 투하한 미국은 원폭 투하 8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피폭 후유증에 대한 인정과 피해자에 대한 사과 한마디가 없습니다. 이 억울함을 어디에서라도 호소하고 싶습니다. 핵 투하에 대한 미국의 책임 인정과 사죄, 배상을 받아내 더 이상 나와 같은 핵 피해자가 없는, 핵 없는 세상을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전 미국의 원폭 투하 책임을 묻는 원폭국제민중법정이 그동안 억눌려 왔던 한국 원폭 피해자들에게 숨을 트일 수 있는 공간이 되리라 생각해 원고로 함께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평생을 핵 피해자로 살아간다는 건 너무나도 잔인합니다. 이러한 잔인한 일을 인류가 또다시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출처 :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

## 종합토론

# 식민지민의 전쟁, 비틀어진 피해

한혜인 아시아평화와역사연구소 연구위원

## 식민지민의 전쟁, 비틀어진 피해

한혜인 아시아평화와역사연구소 연구위원

오늘 세 분의 발표는 조선인 원폭피해자 문제를 수원을 중심으로 하면서도 입체적으로 조명해 주셨습니다. 김승은 선생님은 강제동원과 원폭피해 문제를 유네스코 세계유산 속에서의 일본의 태도와 연결하여, 어떻게 기억되어야 하는가를 생각하게 해 주셨습니다. 소현숙 선생님은 해방 이후 조선인 피폭자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 국가 보상 및 지원을 받게 되었는지, 그리고 향후 과제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대수 선생님은 원폭 피해자들이 전개한 비핵·평화운동을 중심으로 미래지향적 활동의 의의를 조명해 주셨습니다. 세 분의 발표는 조선인 원폭 피해의 구조적 원인, 국가 차원의 책임 회피, 그리고 피해자들의 자력적 운동이라는 세 층위를 잘 알 수 있었습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원폭 투하는 일본의 전쟁관을 비트는 하나의 기재였습니다. 세계를 향해 가해성을 희석하고 피해성을 강조하는 증거로 작동하고, 제2차세계대전에서 일본의 패전의식은 미국에만 있어 미국에는 굴종적이지만, 중국에 대한 패전의식이 없어 과거사에 관해서는 혐 중국적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일 관계 속에서도 원폭피해는 다른 피해와는 달리, '특별하게' 취급되어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어디에 기인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이러한 '특별' 취급이 원폭의 불법 투하에 따른 피해보상 및 배상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을까요? 특히 현재 식민지민에게 주어지는 조치가 충분한 것일까요? 이 문제에 관해서 발표자님들과 깊이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 1 원폭 피해는 어떤 피해일까요?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일본은 메이지 헌법 이래 전쟁 피해에 대한 국가책임을 부정해 왔습니다. 일본은 국가 무담책이나 전쟁 피해 수인론 등의 판례법리를 들어, 군인군속 등 직접적 전쟁에 참여한 사람이 아니고, 민간인의 전쟁 피해나 공습 등은 국가배상을 할 수 없다는 논리를 주장해 왔습니다. 패전 이후 원폭피해자 또한 원호법 등 국가배상의 대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원폭피해자들의 소송은 두 가지로 진행되었습니다. 하나는 피해보상 소송이고 또 하나는 원폭증 인정 소송입니다. 피해보상 소송으로 유명한 것은 시모다 사건이라고 불리우는 1955년 소송입니다. 원폭피해자들은 일본 정부를 대상으로 1955년 도쿄지방법원에 원폭 투하에 따른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지불'을 요구하는 재판을 시작했습니다. 왜 정신적 피해보상이었을까요? 피해자들은 청구의 취지는 '미군의 원폭 투하는 국제법에 위반하는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원폭피해자는 미국에 대해서 손해배상청구권이 있다. 그 배상청구권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포기한 일본 정부는 원폭피해자에게 보상과 배상을 해야 한다'는 논리였습니다. 이에 대해 도쿄지방법원은 미군의 원폭 투하는 국제법(전시 국제법·인도법) 위반이라고 판단했지만, 원고의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국제법은 법 주체가 정부만 해당하고, 미국은 전쟁에 있어서 군의 행동에 대해서는 배상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재판소는 미국 정부 자체를 재판할 수 없다는 국가면제를 일본은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원폭피해자는 미국에 대해 원래부터 청구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일본 정부가 샌프란시스코 조약을 통해 청구권을 포기했다고 하더라도, 원폭피해자에 관해서는 청구권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잃은 것이 없어, 배상도 보상도 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재판소는 "피폭자 개인은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국가가 스스로의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개시한 전쟁으로 많은 사람들을 사망하게 했고, 장애를 갖거나 불안한 생활을 하게 했다. 그러므로 그 피해는 도저히 일반재해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심대하다. 피고(일본국가)는 이에 해당하는 충분한 구제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은 말할 필요가 없다. 입법부와 내각의 책무다. 이 소송을 보게 된 것에서 정치의 빈곤을 탓하지 않을 수 없다"<sup>1)</sup> 하면서 입법을 강구했습니다. 또 하나의 소송은 원폭증 인정에 관한 것입니다. 1966년부터 시작된 것이고,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이외의 지역에서 방사능에 의한 피해, 그리고 2세 3세 등의 구제 문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 2 불법행위에 따른 국가배상이 아니라, 사회 복지법의 틀

시모다 재판에 의해 일본의 사법부는 원폭피해에 대하여, "원폭 투하에 대해서는 미국의 국제법(전시국제법, 국제인권법) 위반"을 인정하면서도 그 위반에 대해서는 국제법 자체가 가지고 있는 한계 즉 개인이 배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정치적 결단을 요구했고, 일본 정부는 이 원폭 피해에 대해 국가 보상에 해당하는

1) 「昭和30年(7)第2914号損害賠償請求事件」, [https://www.courts.go.jp/app/hanrei\\_jp/detail2?id=85737](https://www.courts.go.jp/app/hanrei_jp/detail2?id=85737).

원호법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원호법과는 전혀 별도의 빈곤 구제 등 사회법 체계로 1957년 「원자폭탄 피폭자에 대한 의료 등에 관한 법률」을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이는 따라서 1952년 일본의 원호법이 새롭게 제정될 때, 원호법 체계에서는 '국적' 조항이 들어가 식민지민을 제외했지만, 위의 1957년은 사후 조치의 사회/복지법에 해당하는 것으로 일부러 국적 조항 등을 제시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이후 1968년 9월에 「원자폭탄 피해자에 대한 특별조치에 대한 법률」을 입법하여 시행했습니다. 이는 일본사법부가 자국민의 전쟁의 다른 피해에 관해서는 '전쟁수인론'으로 묵살하는 방식과는 달리, 원폭피해에 대해서는 전쟁을 수행하여 피해를 입힌 일본 정부의 책임을 명시했다는 점, 일본 정부는 그 책임을 수행하기 위해 신속하게 입법적 조치를 취했다는 점을 지적해 두고 싶습니다. 그리고 원폭피해자에 대하여 원호법 체계로 전환한 것은 1994년에 이르러 「피폭자 원호에 관한 법률」입니다.

## 3 식민지민의 피해와 구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회보장적 성격의 원폭피해자에 대한 법률로 국적 조항이 없어, 일본에 거주하는 재일조선인들 중 외국인등록을 필한 자는 피폭자 건강수첩을 발급 받아 수당과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 귀국했던 손진두는 1972년 후쿠오카 지방재판소에서 승소했습니다. 재판부는 "원폭 의료법에는 국적 조항도 없고 적법한 거주 관계가 필요하다는 규정도 없기 때문에 불법입국자를 배제할 이유가 없고, 국적이탈에 대해서도 "전후 평화조약의 발효에 의해 자기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본 국적을 상실한 것이라는 사정을 감안하면 원폭 의료법 적용은 국가적 도의로도 수긍할 수 있다"고 원고 인용판결을 했습니다.<sup>2)</sup>

손진두의 재판 판결 결과, 1979년 한일 양국 간 「재한 피폭자의 의료원호에 관한 3항목」이 합의되는 성과를 얻었지만, 일본 정부는 1974년 7월 22일 "원폭 2법은 일본국 영역을 넘은 거주지로 이전한 피폭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해석된다"라는 취지의 「402호 통달」<sup>3)</sup>, 즉 행정명령으로 재한 피폭자가 일본에서 건강수첩을 발급받더라도 한국으로 귀국하면 수첩은 무용지물이 되어 버리게 했지만, 광귀훈 씨의 소송으로 2003년 402호 통달이 폐지되고 일본 이외 거주자 피폭자도 거주국에서 수첩을 교부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일본은 원폭 피해에 대해서 특별한 입법으로 국적, 거주지와 관계

2) 孫振斗手帳裁判控訴審判決. (福岡지방법원, 1972 제소, 福岡고법 1975. 용인, 최고재판소 1978년 용인) 日本戦後補償裁判総覧, <http://justice.skr.jp/souran/souran-jp-pdf.pdf>.

3) 「昭和49年7月22日衛発第402号 各都道府県知事並びに広島市長及び長崎市長あて厚生省公衆衛生局長通達」

없이 국가적 도의의 차원에서 구제할 수 있는 법을 1957년에 만들었지만, 구 식민지민에게 완전하게 적용되게 된 것은 2003년으로 46년이 걸렸습니다.

## 4 강제동원·청구권협정, 그리고 원폭피해자 문제

원폭피해자의 문제를 강제동원 피해와 연결해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 온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오늘의 발표도 그러한 맥락으로 읽혀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보아온 것과 같이 일본 내에서 원폭피해자 문제는 일본의 일반적 전쟁 피해를 취급하는 국가무담책이나 수인론의 범주에서 취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제의 방안도 원호법이 정하는 원호의 자격 방식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회구제책으로 당연히 '피해'를 중심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피해자에 구 식민지민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일본 정부가 행정명령이라는 법의 해석에서 배제하려 했다는 점에서는 일관적으로 차별적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국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의 책임을 묻는 방식은 식민지 지배를 했기 때문이라거나 강제동원을 당했기 때문에 일본 정부의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청구권협정의 대상이 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청구권 협정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발언하지도 않았습니다.

일본에서 만든 법 취지에 따라, 당연히 받아야 하는 사회적 구제일 뿐입니다. 피해보상은 아직 논의도 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 종합토론

/

# <광복 80년 원폭 80년, 비핵평화를 위한 국가와 시민의 과제> 토론문

/

방학진 민족문제연구소 기획실장

## <광복 80년 원폭 80년, 비핵평화를 위한 국가와 시민의 과제> 토론문

방학진 민족문제연구소 기획실장

발표자(이대수)의 마무리 부분이 발표자의 핵심 주장이라고 보고, 그 내용을 요약하였다.

주요 항목	내용 요약
증언단 구성	1세·2세 피폭 당사자 중요, 영어·일본어 가능자가 필수
소통과 연대	세계 피폭자와의 교류 위해 다국어 소통 및 활동가 참여 필요
한계와 아쉬움	중국·러시아권 연대 미흡, 더 넓은 국제연대 필요
핵의 위협	핵무기는 인류와 지구생태계에 심각한 위협, 후쿠시마 사고는 원전 안전 신화의 허구를 드러냄
국제 반핵운동 필요	한국, 일본, 미국, 카자흐스탄, 호주, 남태평양 도서 국가들과의 연대 및 TPNW 운동 참여 필요
장기 비전	2045년(히로시마·나가사키 100주기)에 맞춰 핵 없는 세상과 생태문명 실현 목표
TPNW 당사국 회의	2026년 11월 뉴욕에서 개최 예정, 미·러·중의 전략핵 논의 주목
핵 정책 동향	전략핵 → 전술핵으로 변화 중, 미국은 전술핵 잠수함 배치
한국 내 조직 강화	수도권으로 이주한 피폭자 중심으로 서울·경기·인천 활동 기반 마련 필요
시민사회와 협력	시민단체 및 평화단체와의 협력, 국제연대 활성화 필요
지속 가능성 확보	실무력·재정(비핵평화기금) 마련 필수
한국의 역사적 역할	12.3 내란, 식민지·독재 유산 극복 후 세계평화 기여 기대

※비고 : 챗 GPT를 이용하여 요약함

발표문은 '비핵 평화를 위한 국가와 시민의 과제'인데 발표문의 마무리를 보면, 비핵 평화를 위해 국가와 시민의 과제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모호하다.

발표자는 '경기도 원폭피해자협의회 창립과 원폭피해자지원조례 제정'을 언급했으나 경기도원폭피해자협의회의 물적·인적 구성, 기능, 연혁, 비전 등을 전혀 알 수 없다. 그

조직이 피해 당사자 조직인지, 전문가 조직인지, 중간지원조직인지 등. (한일) 역사 관련 조직은 일반 조직과 달리 과거를 배경으로 현재(정치, 외교, 교육, 언론 등) 다양한 조직들이 결합되면서 순기능 못지않게 역기능이 드러나고 있다. 따라서 경기도 원폭피해자협의회에 대한 명확한 자기 정체성 부여가 필요하다.

발표자는 경기도 조례에 대해 많은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아래는 원폭 관련 조례 현황이다. 그러나 조례는 지방 정부가 활동할 수 있는 법적 근거이지만 한편으로는 많은 단점이 있다. 대표적으로 미이행 시 페널티가 없다. 또한 공무원들이 민원에 대한 회피책으로 조례 제정을 악용하고 있다. 이를 디커플링이라고 한다. 조례를 살아 움직이게 하려면 강력한 외부 동력(도의회, 당사자 조직)이 필요하다. 과연 「경기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를 살아 움직이게 할 외부 동력은 충분한가. 토론자는 ‘조례 제정 동력’과 ‘조례 활용 동력’은 별개라고 본다.

순번	법령명	지역명	부서
1	경기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	경기도	복지정책과
2	경상남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	경상남도	복지여성국 복지정책과
3	경상북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	경상북도	
4	광주광역시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	광주광역시	
5	대구광역시 동구 원자폭탄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조례	대구광역시 동구	복지정책과
6	대구광역시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	대구광역시	보건의료정책과
7	대구광역시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 시행규칙	대구광역시	보건의료정책과
8	대전광역시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	대전광역시	
9	부산광역시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	부산광역시	건강정책과
10	서울특별시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	서울특별시	감염병관리과
11	울산광역시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	울산광역시	시민건강과
12	인천광역시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	인천광역시	
13	전라남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	전라남도	보건복지국 건강증진과
14	제주특별자치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건강위생과
15	충청북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	충청북도	
16	합천군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	경상남도 합천군	주민복지과

원폭 피해 조례 부서의 문제를 지적한다. 예를 들어 보훈 정책의 경우 중앙정부는 국가보훈부가 담당하지만 지방정부는 보훈 부서가 없고 모두 복지부서이다. 국가보훈의 분야는 크게 독립, 호국, 민주이다. 지방정부는 독립, 호국, 민주 세 파트를 담당하는 부서가 오직 복지부서이다. 즉 중앙부서의 보훈 정책은 지방에 내려가면 오직 연금 배분(teller)으로 축소된다. 과연 지방정부의 관련 조례가 원폭 피해자 지원(배분, teller)을 넘어설 수 있을지 매우 회의적이다.

결론적으로 원폭 피해자 ‘지원’을 넘어서 원폭 피해자의 아픔을 이어받아 지원+조사+교육+외교+인권으로 나아가기 위한 단편적 제안을 하고자 한다.

- (1)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근거로 하는 보건복지부(질병정책과)가 아닌 교육부(동북아역사재단)로 주무 부서를 이전해야 한다. 토론자는 특별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한국인원자폭탄피해자지원위원회’는 2017년 8월 30일 첫 회의 개최 이후 추가 활동 기록을 찾지 못했다.
- (2) 경기도 원폭피해자협의회와 같은 도 단위 협의회를 중앙 단위로 통합하여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의 실질적 작동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 (3) 독립운동을 포함함 모든 식민시대의 증언자들의 부재(不在) 시대가 도래하고 있는 만큼, 개별적 대응(강제동원, 원폭 등) 보다는 공동 대응과 공공 역사를 통한 지속가능성에 단체의 역량을 모아야 할 것이다.



※ 해당 자료집에 있는 자료들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 전재와 복제를 금합니다.

